

和解 協力時代の

統一教育 基本方向

1993

統 一 院

目 次

I. 序 文 / 1

II. 統一教育의 意義와 課題 / 4

III. 새로운 統一教育의 基本前提와 方向 / 7

IV. 實行上の 留意點 / 104

1. 學校에서의 統一教育 / 104

2. 社會에서의 統一教育 / 108

I. 序 文

최근 韓半島를 둘러싼 國內外 情勢는 거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왔다. 밖으로는 東歐 共產主義 諸國의 몰락과 蘇聯邦의 해체 등 2차대전 이래 세계질서를 지배해 온 東·西 冷戰體制가 붕괴되고, 和解와 協力, 開放의 조류 속에 새로운 國際秩序의 改編 作業이 진행되고 있으며, 안으로 韓半島의 南과 北에서는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동안 지속되어 온 分斷과 對峙의 굴레에서 벗어나 和解와 協力, 平和共存의 관계를 모색해 나가는 새로운 時代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오늘의 國際情勢 變化의 흐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가장 큰 特徵은 근 반세기에 걸친 양대 진영간의 이데올로기 대립과 冷戰的 對決狀態가 빚어 왔던 정치, 군사적 긴장감이 크게 완화되고 和解와 協力の 새로운 관계가 조성되어 가는 가운데, 個別 國家간에는 자국의 利益을 최우선으로 하는 國家利己主義와 새로운 民族主義의 追求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의 世界情勢 속에서 南北韓關係에도 획기적인 轉換이 가져다 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갈라져 있는 나라의 統一을 하루 속히 실현하여 民族의 自尊과

繁榮을 이룩해 나가야겠다는 높은 民族的 自覺과 열정 속에 그동안 끈질기게 경주되어 온 우리 민족의 통일 노력은 마침내 『南北 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의 채택 발표라는 歷史的인 結實을 가져 왔다. 이에 따라 이 땅에도 對決과 分斷의 시대를 청산하고 民族의 숙원인 平和統一을 이룩해 나가는 새 歷史의 場을 열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外部環境의 큰 變化와 함께 南北關係의 새로운 展開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 왔던 統一教育의 目標와 方向, 그리고 그 內容에 있어 적지않은 修正과 補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1992년 5월 統一院에서는 統一教育을 실시함에 있어 더욱 우선되고 強調되어야 할 統一教育의 基本方向과 그에 관한 主要 觀點들을 定立하여 『和解 協力時代의 統一教育 基本方向』이란 題下의 『統一教育指針』을 제시한 바 있다.

이 指針이 提供된 이래 오늘까지 內外의 統一環境과 統一에 대한 國民적 期待나 認識面에 있어서 적지 않은 變化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關係 專門家들과 各급 教育現場으로부터 많은 意見들이 제시되고 補完點들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意見들을 광범하게 받아들여 새롭게 펴내는 本 指針은 당초의 것에 2개 主題項(7項, 23項)을 追加한 외에 각 主題項目의 解説 內容을 부분적으로 修正·補完하고, 각 主題項目別로 參考할 수 있는 文獻目錄을 분류 附記하여, 이용자들이 이들 文獻들을

통해 좀 더 체계있는 知識과 情報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이 指針書가 統一教育의 一線에 널리 보급되어 國民들에게 새로운 時代에 걸맞는 統一意識과 확고한 價値觀을 심어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期待하는 바이다.

Ⅱ. 統一教育의 意義와 課題

統一教育이란 우리 民族의 한결 같은 염원인 平和統一을 앞당겨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된 국가에서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價値觀과 態度를 모든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教育을 의미한다.

따라서 統一教育은 統一을 앞당기기 위한 努力과 아울러 統一以後의 삶을 準備하고 對備하는 내용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 國家의 存立과 國民의 安寧, 그리고 통일성취에 대한 現實的 障礙와 威脅要素에 대한 警戒心도 가르쳐서, 모든 국민이 균형있고, 合理的인 統一觀을 형성하고, 이에 부합하는 行동을 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南北의 分斷과 統一에 관해서 국민들 간에는 다양한 의견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우선 分斷의 苦痛을 직접 체험하고, 6.25 戰爭을 겪은 既成世代와 그렇지 못한 젊은 世代 사이에 시각의 차이가 크다. 또 지향하는 世界觀과 理念에 따라 統一意識의 방향도 다르다.

統一教育은 각계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시각의 차이를 융화시키고, 合理的인 귀일점을 발견하여, 이것을 중심으로 國

民的 共感帶를 형성함으로써 民族統一의 새로운 발판을 구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젊은 세대를 위한 統一教育은 모든 教育機關(幼稚園, 初, 中, 高, 大)을 통해서 시도되어야 하되, 새로운 時代狀況에 맞게끔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아울러 學校 밖에 있는 젊은이와 既成世代를 대상으로 한 統一教育도 개선되어야 한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질 統一教育은 학교교육과 긴밀히 연계되고 체계화되어야 하지만, 이 둘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다. 특히 社會教育에 있어서는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知識과 情報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균형 있는 관점에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統一教育은 學校의 수업이나 社會教育의 강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新聞, 放送, TV, 라디오 등 대중을 대상으로 한 모든 매체와 수단들이 統一觀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며, 南北 住民間의 體育, 文化藝術, 經濟 등 모든 분야에서의 交流와 만남의 체험이 또한 統一觀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統一教育은 그 대상이 어느 世代에 속하고 어떤 理念과 世界觀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民主的이고 平和的이며, 合法的인 節次에 따라서 성취해 나갈 수 있는 통일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그런 통일을 하루 속히 이루어 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는 使命意識을 가질 수 있도

록 전개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民族間의 和解와 協力·交流가 활성화되는 새로운 時代가 남북간에 전개되고 있다.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오랜 세월 갈라져 살아온 南北의 住民이 이제부터는 서로 만나고 交流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共同體的 삶의 場이 점차 넓혀지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國民 各自가 民族의 成員으로서 폭 넓은 認識과 歷史的 眼目을 가지고, 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民族共同體的 삶과 統一國家의 未來像에 대한 共感帶를 폭 넓게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새로운 統一教育의 基本前提와 方向

아래에 열거된 27個 항목에 걸친 『統一教育의 基本前提와 方向』은 최근의 內外的 狀況의 變化에 부응하여 각종 統一教育 課程과 活動에서 더욱 強調되어야 하거나 追加되어야 할 主題項目들을 선정하여 각 主題에서 다루어질 基本前提와 教授上 특히 유의되어야 할 基本觀點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포함되어 왔던 統一教育의 主要 要目들이 해당 教育課程에서 輕視되거나 排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제시된 主題項目에 관한 細部的 內容은 계획된 프로그램에 알맞게 再編成되어야 한다.

統一論議의 基本前提

1. 南北統一의 當爲성과 目標, 그리고 바람직한 統一像이 國民 個個人의 意識속에 확고히 定立되어야 한다. / P15
2. 南北統一은 韓民族의 7千萬 成員 모두가 主體가 되고, 民族成員 모두에게 自由와 人權, 福祉와 繁榮을 約束하는 것이어야

한다. / P19

3. 南北統一은 우리 民族成員 모두에게 바람직하고 利로운 것이지만, 그것을 實踐하는 데는 苦痛과 犧牲이 수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統一은 이러한 苦痛과 犧牲을 堪耐하고도 今世紀내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 民族 모두의 歷史的 課題이다. / P22
4. 統一은 南北分斷과 對決로 소모되어 온 民族의 力量을 하나로 結集시키는 중요한 契機이다. 이러한 統一은 우리 民族의 繁榮에 寄與할 뿐만 아니라 東北亞의 安定은 물론 世界平和에도 이바지하는 길이다. / P25
5. 韓半島의 南北統一 問題는 우리 民族 內部 問題일 뿐만 아니라 國際的 問題이기도 하다. / P28
6. 南北統一은 우리 國民 모두의 智慧와 力量을 모아 추진해야 될 民族的 課題이다. 따라서 統一問題에 대한 다양한 主張과 開放的인 論議는 바람직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統一論議에 있어 우리 體制의 基本價値와 行動規範은 尊重되어야 한다. / P32

分斷現實의 理解

7. 南北分斷은 당초 國際的 冷戰이라는 他律的 要因에 의해서 招

來되었지만, 우리 民族 自體의 內部 分裂 要因에 의해서 그 分斷狀態가 深化되어 왔다. 먼저 民族和合을 이룩하는 길이 分斷을 解消하는 지름길이다. / P 35.

8. 『6.25전쟁』은 民族史上 유례없는 悲劇이었다. 이것은 어떤 名分, 어떤 理由로도 正當化 될 수 없으며,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 P 39
9. 南北 分斷狀況의 오랜 지속은 民族成員의 個人的 苦痛과 不便은 물론, 南北韓 民族社會의 異質化를 심화시키고 民族史의 方向을 歪曲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民族繁榮을 가로막는 심각한 障礙要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分斷은 하루속히 克服되어야 한다. / P 43
10. 北韓社會의 實相과 그 變化의 趨勢를 올바르게 파악한다는 것은 統一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北韓은 겨레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統一을 이룩할 相對方이기 때문이다. / P 46
11. 統一問題와 安保問題는 그 性格上 엄연히 구분되는 問題이면서 不可分의 關係를 갖고 있다. 統一問題가 民族의 將來를 내다보는 問題라면, 安保問題는 現實로 當面해 있는 우리의 價値體系와 삶 的 與件을 지키는 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統一을 이룩하려는 努力과 더불어 國家安保를 튼튼히 하는 努力을 잠시도 게을리 할 수 없다. / P 49

統一與件 認識

12. 北韓의 『南朝鮮 解放論』에 입각한 對南 革命戰略은 平和統一의 성취에 가장 큰 障礙要因이다./P 52
13. 自由와 人權의 尊重은 모든 人類가 추구하는 普遍的 價値이다. 北韓 住民에게도 自由와 人權은 尊重되어야 하며, 이를 추구하는 것은 民族成員 모두의 責任이다./P 55
14. 分斷된 民族社會의 開放과 交流는 民族共同體의 삶을 回復·發展시켜 나가는 基本條件이다. 따라서 닫혀있는 北韓社會는 마땅히 開放되어야 한다./P 58
15. 北韓 住民은 우리와 함께 같은 共同體를 이루어 살아가야 할 같은 民族社會의 構成員이다. 그러나 현재의 北韓 政權은 우리의 生存과 安寧을 威脅하는 實體이다./P 61
16. 南北韓은 UN을 포함한 國際社會의 책임있는 成員이다. 南北韓이 國際舞臺에서 서로 協力하며 民族 共同의 利益을 추구하는 것은 民族自尊과 統一의 성취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다./P 64
17. 世界의 대부분 國家는 편협한 이데올로기적 價値의 맹목적 추구보다는 個人의 自由와 人權, 그리고 福祉의 增進을 추구하는 새로운 人間主義的 이데올로기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P 67

統一政策

18. 統一推進의 原則과 過程, 統一된 國家의 未來像에 대한 汎國民的 合意가 統一政策의 原動力이 된다. / P 71
19. 南北分斷의 克服을 위한 統一政策은 合理的이고 實現可能하며 全體的 合意를 바탕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民族的인 正當性에 입각하는 것이어야 한다. / P 74
20.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韓半島 分斷現實과 오늘의 時代的 狀況과 潮流에 부합하는 가장 現實的인 代案이다. / P 78
21. 南北韓 社會의 同質性은 유구한 民族史的 文化傳統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民族的 同質性이 우리 民族을 하나로 묶고 있는 연결고리이며, 統一을 推進하는 原動力이 된다. / P 82
22. 南과 北, 그리고 全世界에 흩어져 살고 있는 海外同胞들이 모두 함께 한민족공동체를 구성하는 成員이며, 둘로 갈라져 있는 南과 北의 統一은 한민족공동체의 基盤을 공고하게 다져 나가는 일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 P 86
23. 『南北基本合意書』는 앞으로 南北關係의 改善과 平和統一을 성취해 나갈 基本章典으로서 南과 北은 이를 성실히 履行해야 할 民族史的 責務를 지고 있는 것이다. / P 89

統一準備

24. 南北의 住民들이 서로의 世界觀, 價値觀 그리고 삶의 方式의 差異를 인정하고 相對方의 立場을 理解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民族社會의 統合을 촉진하고, 統一 以後의 삶을 準備하는 始發點이다. / P 92
25. 個人的 社會的 緊張과 葛藤, 利害關係를 合理的으로 調整하고 解決할 수 있는 能力의 培養이 統一을 앞당겨 나가며 統一에 對備하는 것이다. / P 95
26. 統一을 앞당겨 實現하는 일 못지않게 統一 以後의 삶에 對備하는 일도 중요하다. 統一은 그 自體가 目的이 아니라 民族 繁榮을 위한 하나의 條件인 것이다. / P 98
27. 平和는 統一로 가는 過程에서 뿐만 아니라 統一 以後의 삶이 幸福한 것이 될 수 있기 위해서 民族成員 모두의 意識 속에 定着되어야 할 最優先的 價値이다. / P 101

各 主題別 基本前提 및 指導觀點

統一論議의 基本前提

1. 南北統一의 當爲성과 目標, 그리고 바람직한 統一像이 國民 個個人的 意識속에 확고히 定立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統一이란 명제는 더이상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란 형태로 관념 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統一은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온 現實問題로, 민족 모두가 풀어나가야 할 實踐的 課題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統一을 관념의 세계로만 보는 경우, 이에 대한 우리의 認識과 論議는 한없이 자유로울 수는 있으나, 그것은 공허하고 맹목적인 통일론에 빠질 우려가 크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모두가 머지않아 당면케 될 現實의 問題로 概念化 하는 경우,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향해 나가야 하는 특정한 價値體系나 共同的 目標가 무엇이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시사해 줄 수 있게 된다.

현실문제로 다가온 統一問題에 대한 認識과 論議에 있어 국민 각자는 다음의 네가지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첫째는 우리는 왜 統一을 이룩하려 하는가 하는 當爲에 관한 물음이다. 분단의 초기에는 통일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문은 제기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分斷이 長期化

된 오늘의 시점에서 통일이 왜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우리 사회 내에서도 적지않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統一의 當爲性에 대한 인식은 南과 北이 크게 다르고, 같은 사회에 있어서도 世代와 階層에 따라서도 다르다.

둘째는 어떤 통일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인가 하는 統一의 內容과 方法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한 남북한의 견해는 크게 다르다. 우리는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주역이 되어 平和的인 方法과 民主的인 節次를 통해 남북이 共存 共榮할 수 있는 통일을 이룩하려 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압제하에 있는 南朝鮮 人民들을 解放”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無產階級’이 독재하는 共產化 統一을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內容과 方法의 통일이 민족의 현실과 장래에 비추어 가장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인가를 분별하는 價値基準을 우리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셋째는 統一의 目標 즉, 어떤 통일국가를 건설해 나가려 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단순히 分斷을 克服하거나 분단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통일은 반드시 우리 민족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未來指向的인 것이 되어야 하고, 통일국가는 민족성원 모두의 염원을 담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점에 있어서도 南과 北은 입장을 크게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國民 각자가 그리고 있는 統一의 未來像 역시 다르다.

넷째는 統一을 촉진하거나 가로막는 내외의 與件과 環境을 보는 觀點의 正誤이다. 統一을 추진하는 데 있어 南北韓이 처하고 있는 오늘의 內部的 狀況과 國際的 環境與件은 중대한 變수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를 보는 시각과 評價 또한 各기 다르다.

이같이 서로 다른 統一의 當爲性이 목표에 대한 思想들과 統一의 方法과 內容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像’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을 때 통일에 대한 國民的 合意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統일을 지향하는 國民的 意志의 結집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統一敎育에 있어서는 통일문제에 대한 國民의 상이한 觀點들을 어떻게 하나로 합치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과제가 된다.

【 참고문헌 】

- ① 양호민, “통일문제의 이해”,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양호민 외 9, 나남, 1992), pp.17-48.
-통일이란 무엇인가 / 분단과 시련의 역사 / 통일한국의 미래상
/ 남·북한의 통일방안
- ② 이상우, “하나의 한국을 향한 우리의 길”, 『통일한국의 모색』
(이상우 외 9, 박영사, 1987), pp.1-18.
-남북한 관계의 기본성격 / 통일의 당위 / 통일의 기초로서의
민족주의, 자유민주주의 / 통일의 현실차원과 내외여건 / 통일

한국의 모색

- ③ 민병천, “평화통일의 당위성”, 『신통일론』
(고려원, 1992), pp.11-25.
-통일의 개념과 성격 / 평화통일의 당위성
- ④ 이상우, “민족통일의 과제”,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이상우 외 4, 박영사, 1984), pp.159-212.
-통일문제의 본질 / 통일노력의 전개 / 앞으로의 정책과제
- ⑤ 김종립, “남북한 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체 형성 이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
(국토통일원, 1990), pp.47-72.
-서론 / 통일은 공동선인가 / 공동선 성취의 딜레마 / 공동선
딜레마 해결방법 / 공동체의 구조적 특성 / 초공동체 형성 : 통일
의 지름길 / 결론 : 민족공동체와 통일 성취

2. 南北統一은 한민족의 7千萬 成員 모두가 主體가 되고, 民族成員 모두에게 自由와 人權, 福祉와 繁榮을 約束하는 것이어야 한다.

南과 北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 모두의 이해와 장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民族 전체의 運命이 매달려 있는 基本問題이다. 따라서 統一의 目標나 方法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 특정한 계층이나 계급, 정권에 의해서 전횡되거나 민족성원 일부만의 이익이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7千萬 民族成員 모두가 함께 결정하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主體가 되어야 한다.

통일은 南과 北이 함께 繁榮(共榮)할 수 있고, 양측 모두에게 利로운 것(共益)이 되어야 한다. 통일이 어느 일방만의 번영과 복지, 이익만을 약속하고, 어느 한편을 해롭게 하는 경우, 그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도 民族 전체의 和合과 發展을 기해나갈 수 없게 된다.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또 統一 以後의 삶이 좀 더 자유롭고 복된 것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된 국가에서는 民族成員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개개인의 自由와 기본적인 人權이 보장되어야 하며 고른 福祉의 배분과 繁榮이 약속되어야 한다.

민족성원 모두가 統一의 主體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통일이 특정 계급이나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닌 民族 전체의 福祉와 繁榮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에서 민족 전체 성원이 아닌 어느 특정 계층이나 집단, 예컨대 민중 통일론자들이 말하는 ‘民衆’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人民’, ‘無產階級’은 민족성원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이 주제와 관련해서 유의할 점은 ‘民族成員 모두가 통일의 주인이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個別 成員 모두가 통일문제를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참고문헌】

- ① 이흥구,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주와 자유”, 『통일한국의 모색』
(이상우 외 9, 박영사, 1987), pp.19-43.
-통일을 보는 역사적 시각 / 민주주의 한국적 의미 / 개인적 자유와 민족적 자유 / 통일의 미래상과 이념의 공존
- ② 이흥구, “분단시대의 역사인식과 통일문화 창조”, 『통일문화 창조를 위한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pp.25-42.
-분단시대의 역사인식과 그 한계성 / 규범과 상황의 괴리 / 인간관, 사회관, 역사관의 분열 / 민중과 민족, 그리고 통일의

주체 / 분단책임과 통일전망에 대한 균형된 감각 / 맺는 생각

- ③ 양호민, “통일—어떻게 준비하나”,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양호민 외 9, 나남, 1992), pp.237-379.
—어떤 통일이 바람직한가 / 통일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 통일은 꿈이 아닌 현실이다.

- ④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1990, 206면)
—정치·국제정치분야 / 사회·경제분야 / 교육·윤리분야 / 예술·문화분야

3. 南北統一은 우리 民族成員 모두에게 바람직하고 利로운 것이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苦痛과 犧牲이 수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統一은 이러한 苦痛과 犧牲을 堪耐하고도 今世紀內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 民族 모두의 歷史的 課題이다.

남북통일이 되면 個人과 國家, 民族 모두가 분단으로 인해 걸어온 여러가지 苦痛과 不便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남북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대결로 인한 국력의 소모를 방지할 수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統一은 많은 利로움과 함께 더 큰 發展의 機會를 제공해 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통일은 이같은 이로움과 기회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남북은 반세기에 가까운 오랜 세월동안 상이한 理念과 體制 아래 서로 다른 삶을 영위해 왔기 때문에 쌍방간에는 갖가지 制度와 生活樣式, 價値性向 등 여러 면에서 많은 異質性이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경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混亂과 葛藤, 不便과 犧牲이 당분간 뒤따를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個人的 國家的 차원에서 요구되는 고통과 희생, 그리고 經濟的 負擔은 막중한 것이 된다. 그러나 통일은 이러한 부담이나 고통 때문에 포기하거나 뒤로 미룰 수는 없다.

東西獨의 統一에서 우리는 많은 敎訓을 얻는다. 1990년 10월 3일 부로 명분상으로는 통일을 이루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아직 실질적인 社會·文化的 統一은 멀었다고 이야기 한다. 통일과 더불어

생겨나기 시작한 分斷 後遺症은 예상보다 심각했기 때문이다. 막대한 統一費用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의 증대, 고용문제, 생산성의 하락문제, 청소년교육문제, 동서독 주민간의 社會·心理的 葛藤 야기 등이 그것이다. 이런 후유증은 결국 참고 견디어 낼 문제들이다. 통일을 앞두고 우리는 이런 문제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한다.

이제 교육자 모두는 특히 다음 세가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오늘의 시점에서 통일을 서둘러 성취해야 하는 이유를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民族的 同質性의 파괴, 民族史와 傳統의 단절 가능성, 離散家族問題 해결을 위한 인도적 요청 등 시급하고 엄중한 당면과제들을 예로 들어 설명해 줌으로써 통일성취를 위한 民族的 召命意識을 고취해야 한다.

둘째, 統一問題에 대한 無關心과 방관적 태도는 분단된 나라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민족의 일원으로서 맡겨진 責任과 使命을 저버리는 것임을 환기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눈앞의 안일만을 추구하여 오늘의 不便과 苦痛, 犧牲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조국통일이란 내일의 영광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한다.

【 참고문헌 】

- ① 신창섭, 『분단보다 통일비용이 싸다』(열음사, 1990, 229면)
-독일이 통일됐다 / 통일과정 / 통일원동력 / 통독의 현장 / 통일
과 미래 / 자료
- ② 통일원 편, 『독일통일과 한반도』(양성철 외 1, 1991, 219면)
-동서독 통일실현 과정의 점검 / 남북한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 ③ 황성모, 『통일독일 현장연구』(도서출판 일념, 1990, 305면)
-분단과 통일과정의 역사 / 통독 현장을 가다 / 통일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 통일후의 문제들
- ④ 서병철, “통일후의 문제점과 해결조치”, 『공산권 붕괴와
독일의 통일』(계축문화사, 1991), pp.317-343.
-통일후의 어려움 / 동독지역에 대한 지원 / 부진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 사회적 심리적 갈등과 새 정치문화 /
국가질서와 법률체계 정리
- ⑤ 양호민, “통일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양호민 외 9, 나남, 1992), pp.255-374.
-정치이념·체제통합의 과제 / 한국의 과제 / 북한의 정치개혁상
의 과제 / 경제통합의 과제 / 사회와 문화통합의 과제 / 통일
외교과제 / 법제도 통합의 과제 /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
통일을 위한 국방

4. 統一은 南北分斷과 對決로 소모되어 온 民族의 力量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중요한 契機이다. 이러한 統一은 우리 民族의 繁榮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東北亞의 安定은 물론 世界平和에도 이바지하는 길이다.

우리 民族은 뜻아닌 分斷으로 말미암아 동서 양 진영간의 대결 구조에 각기 따로 편입되어 쓸모없는 對決과 競爭을 지속함으로써 민족적 잠재력이 분산되고 낭비되어 그 발전이 크게 위축되어 왔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 이래 반세기에 걸쳐 지속되어 온 東西 冷戰體制가 무너진 오늘날에 와서는 南과 北은 더 이상 스스로의 뜻에 반하여 민족의 역량을 둘로 나누어 소진시킬 이유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민족성원의 뜻과 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집시키고, 작용시켜서 民族共同의 利益과 發展에 가장 핵심적 관건이 되고있는 남북통일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성취해 내는가 하는 것이 된다.

統一을 이룩하여 둘로 나뉘어진 民族의 力量을 하나로 합칠 수 있을 때 우리 민족은 상승적 發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統一로 결집된 민족역량의 발양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繁榮과 發展을 기약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韓半島와 東北亞에 平和와 安定, 그리고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어서 주변국의 이익과 世界平和, 人類의 未來에도 크게 공헌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땅에 실현될 통일국가는 국가간의 平和共存과 協力, 協同을 지향해 나가고 있는 시대조류에 순응해 나가는 평화로운 선린국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해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한반도에서의 統一은 주변국의 기존 이익과 동북아에서의 평화질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평화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世界史的 正當性을 갖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참고문헌】

- ① 진덕규, “한국의 민족개념과 민족의 통합”, 『통일한국의 모색』
(이상우 외 9, 박영사, 1987), pp.44-77.
- 머리말 /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요구 / 민족개념의 일반적인 논의 / 민족·민족국가·민족주의 / 한국사회의 민족문제와 통일 / 통합민족의 이념과 가치체계 / 마침말
- ② 한승주, “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평화통일의 좌표”, 『남북분단의 극복과 평화』(고대 평화연구소 편, 법문사, 1990),
pp.208-236.
- 머리말 / 독일의 교훈 / 남북한과 동서독의 상이성 / 동북아의 국제질서와 남북한 문제 / 북한의 동태와 남북한 관계 / 남북한의 평화공존 / 맺는말

- ③ 하영선,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청계연구소, 1989, 433면)
 -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 동북아시아 군사체제와 한국 / 국제군사체제 / 부록
- ④ 통일원 편,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1990, 198면)
 - 1990년대 초강대국과 동아시아(노경수) / 소련의 신안보관과 북한의 군축정책(정진민) / 소·일관계 개선과 동북아 정치 군사 질서(신정현) / 남북한간의 평화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이서항) /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박영호) / 한반도에서의 운용적 군비통제 방안(박영규) / 한반도에서의 구조적 군비통제 방안(하영선) / 남북한 군비통제의 검증방안(홍종만)
- ⑤ 구영록 외, 『남북한의 평화구조』(법문사, 1990, 504면)
 -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의 국제환경 /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체제와 한반도 / 한·미 군사관계의 새로운 방향 모색 / 한·일 안보관계 / 한·미 안보협력과 군사기술 이전 / 소련·북한 군사관계 / 중국의 대북한 군사정책 / 공산권 외교의 등장과 전개 / 남·북한 무력갈등과 새로운 대안 / 남·북한 평화체제의 접근방법 및 방안 / 결론

5. 韓半島의 南北統一 問題는 우리 民族 內部 問題일 뿐만 아니라 國際的 問題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분단이 제2차대전 이후 형성된 冷戰體制下의 국제정치적 利害다툼의 결과에서 빚어지고 심화되어 왔듯이 이러한 분단의 해결을 위한 통일 또한 주변 국가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관심과 이해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國際政治의 판도에서 차지하는 地政學的 位置 때문에 한반도는 강대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중요한 장소로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최근에 와서 동서간의 冷戰體制 解體로 한반도문제를 ‘民族 內部問題視’하려는 경향이 강화, 확산되고는 있으나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國際的 影響力은 아직도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

물론 갈라져 있는 남북한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일문제는 우리 民族 內部的 問題이기도 하다. 그러나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外的環境을 조성하는 문제는 주변국가와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므로 國際的 問題가 된다. 다시말해 남북통일의 과제는 民族內部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도 해야하고, 아울러 이러한 우리의 통일 노력을 주변세력과 국제사회가 지지하고 후원해 줄 수 있도록 外的環境을 능동적으로 조성해 나가려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統一問題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解決方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國際情勢

의 變化推移와 주변 각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향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것이 된다.

우리의 南北統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환경적 측면을 이해시킴에 있어서는 첫째로 우리의 自主的 努力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남에 의존하거나 외세를 빌려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는 내외의 수많은 歷史的 事例가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단순히 민족 내부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우,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있어 균형을 잃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로 韓半島에서 統一을 기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노력이 이웃 국가들 뿐만 아니라 世界 各國의 利益과 어떻게 一致하고 또 상반되고 있는가 하는 점과, 美·蘇를 비롯한 日本 등 이땅의 분단에 歷史的으로 責任이 있는 국가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에 협조할 國際政治的 義務가 지워져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치적 力學構造와 國際情勢의 변화추이를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은 統一의 過程에서 뿐만 아니라 統一 以後를 對備하기 위한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주제가 된다.

【 참고문헌 】

- ① 김달중, “한반도의 국제적 위상과 통일문화창조” 『통일문화 창조를 위한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85), pp.85-110.
- 지정학과 냉전논리학의 한반도 위상 / 동북아 4강관계 속에서의 한반도 위상 /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와 국제화 / 남북한 쌍무관계의 활성화를 위한 자주성 확립
- ② 이은호 편, 『남북한과 국제정치』(서울프레스, 1992, 303면)
- 국제정세의 변동과 한반도 / 주변강대국의 한반도 정책 / 북한의 변화와 통일전망 / 한반도의 군비문제
- ③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박영사, 1975, 305면)
- 남북한관계의 전개과정 / 주변강대국의 한반도 구상 / 아시아 주변국의 동향
- ④ 안병준, “국제권력정치와 한반도 통일”,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박영사, 1984), pp.65-106.
- 국제권력정치의 속성과 한반도 통일 / 4강관계와 한반도 / 남북한 관계의 여러 측면 / 한반도 중립화와 통일문제 / 남북한 협상시대와 민족공영체 형성
- ⑤ 윤형진 외, 『신세계 질서와 민족통일』(살림터, 1991, 305면)
- 동북아질서 재편과 한반도 : 한·미관계 / 한·일관계 / 한·소관계 / 한·중관계 / 조·일관계 / 남북한 UN 동시가입에서 제기된 문제

⑥ 구영록 외, 『남북한의 평화구조』(법문사, 1990, 504면)

-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의 국제환경 /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체제와 한반도 / 한·미 군사관계의 새로운 방향 모색 / 한·일 안보관계 / 한·미 안보협력과 군사기술 이전 / 소련·북한 군사관계 / 중국의 대북한 군사정책 / 공산권 외교의 등장과 전개 / 남·북한 무력갈등과 새로운 대안 / 남·북한 평화체제의 접근방법 및 방안 / 결론

6. 南北統一은 우리 國民 모두의 智慧와 力量을 모아 추진해야 될 民族的 課題이다. 따라서 統一問題에 대한 다양한 主張과 開放的인 論議는 바람직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統一論議에 있어 우리 體制의 基本價値와 行動規範은 존중되어야 한다.

남북간의 統一問題는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利害와 장래가 걸려 있어 가장 중요한 관심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성원이면 누구나 통일문제에 대해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로운 統一論議를 통해 정부는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며, 공개된 토론을 통해 國民的 共感과 合意를 도출해 낼 수 있고, 통일에 대한 參與意識도 높혀 나갈 수 있다. 따라서 국민 각자가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는 가능한 한 확대되어야 하며 建設的인 論議는 적극 격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선택한 自由民主體制의 基本價値와 行動規範이 존중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논의에서 존중되어야 할 우리 체제의 基本價値와 行動規範은 우리 사회 전체성원의 뜻에 따라 民主的으로 제정된 憲法과 實定法 체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논의는 이러한 실정법적 한계와 질서 속에 전개되어야 하며, 논의에 참가하는 각자는 이러한 기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경우 自己 行爲에 대한 責任도 함께 져야하는 것이다.

統一에 대한 論議에 있어서 특히 警戒해야 할 태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는 자기주장만이 옳다는 獨善論에 대한 경계이다. 이러한 독선론은 자기주장 이외에 다른 사람의 주장과 견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게 된다. 독선론은 個人의 人格的 특성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특정 理念이나 價値觀에 맹목적으로 집착할 때에도 생겨난다. 자기 주장만이 옳다는 비타협적이고 편파적인 사고야 말로 통일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와 참여를 저해하는 根本的인 障礙가 된다.

둘째는 感傷的, 非現實的인 논의와 無責任한 주장이 낳게 되는 부작용이다. 통일에 대한 환상적 기대나 감상에 빠진 나머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내세우거나, 특정한 理念路線에 편향된 논의의 전개는 國論의 分裂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것이다.

셋째는 黑白論理나 極端論理에 빠질 위험성에 대한 경계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가치판단과 선택에 있어서는 지극히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편협하고 고식적인 사고방식에서 오는 極端論이나 冷戰的 시각에 기초한 黑白論理에 빠질 위험성은 항상 경계되어야 한다.

넷째는 偽裝된 統一論議의 대두 가능성이다. 통일논의를 빙자하여 숨겨진 또다른 목적을 달성하려는 기도는 건설적이며 생산적인 통일논의의 전개를 위해 항상 警戒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① 김창순, “국민상 정립의 과제와 통일문화 창조”, 『통일문화 창조를 위한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85), pp.127-148.
- 국민상 정립을 위한 기본사상 / 민족공동체의 재통일 이념 / 통일문화의 창조운동과 과제
- ② 박창희, “민중통일주체론”, 『통일논의의 제문제』(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편, 대왕사, 1988), pp.146-176.
- 민중론의 대두 / 민중운동의 전개양상 / 민중통일논의의 특징 / 민중통일의 목표 / 결론
- ③ 이흥구, “분단시대의 역사인식과 통일문화 창조”, 『통일문화 창조를 위한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85), pp.25-42.
- 분단시대의 역사인식과 그 한계성 / 규범과 상황의 괴리 / 인간관, 사회관, 역사관의 분열 / 민중과 민족, 그리고 통일의 주체 / 분단책임과 통일전망에 대한 균형된 감각 / 맺는 생각
- ④ 이흥구, “자유사회의 이념과 다가올 통일국가”, 『민족과 자유의 이념』(박용현 외 9, 고려원, 1987), pp.167-204.
- 우리들의 이상 / 자유와 민주를 보는 시각 /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신념 / 국가이념과 민족통일의 문제 / 민주발전을 위한 지평 / 개인적 자유와 민족적 자유 / 내일을 위한 오늘의 과제

分斷現實의 理解

7. 南北分斷은 당초 國際的 冷戰이라는 他律的 要因에 의해서 초래되었지만, 우리 民族 自體의 內部分裂 要因에 의해서 그 分斷狀態가 深化되어 왔다. 먼저 民族和合을 이룩하는 길이 分斷을 解消하는 지름길이다.

南北分斷이 당초 外세에 의해서 우리에게 강요된 것이라는 점은 주지된 사실이며, 그후 分斷狀態가 반세기가 되도록 지속되어 온 것도 外세의 힘이 크게 작용한 탓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分斷상태의 해소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중 큰 비중은 우리 民族 自體에서 찾아지는 것이다.

民族 分斷의 淸은 해방 이전 獨立運動의 전개과정에서 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 갈래의 理念路線이 극단적인 對決을 보임으로써 獨立운동은 統合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獨立운동 과정에서의 民族 內部的 對決은 해방 이후의 새로운 國家건설을 놓고도 分열을 가져왔던 것이다.

分斷 初期까지만 하여도 민족의 지도자들간에 이미 대립과 分열이 크게 노정 되었지만 南北住民들간의 同質意識은 매우 강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同族相殘의 6.25戰爭을 겪은 후에는 민족의식의 동질성마저 깨지고, 이로인해 심화된 敵對意識은 민족사회의 재결합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세계사를 돌이켜 보면, 어떠한 강대국의 흥망도 결국 그 국가를 구성하는 민족에게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외침이 있기 전에 民族 內部에서 먼저 分裂과 對立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어느나라의 융성이나 발전은 결국 民族의 和合에 달려있다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民族의 和合은 잃었던 나라도 다시 찾게하는 原動力이 됨을 우리는 유대민족의 건국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分斷의 原因을 외세에 돌리는 경향이 더 컸던게 사실이다. 이 경우 우리는 분단의 解消까지 외세에서 구하는 무책임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분단의 원인은 우리 민족 자체에 돌려지는 책임이 더 크며, 따라서 분단을 극복하는 일 역시 自主的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課題이다.

이 주제의 敎育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첫째, 분단의 原因과 過程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는 分斷의 解決을 위한 적절한 方法을 摸索하기 위한 것이지 분단의 責任所在를 규명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國際的 要因에 의해서 초래된 분단이 民族 內部的 葛藤과 對立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었다는 歷史的인 敎訓을 통하여 分斷의 克服을 위해서는 民族和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分斷의 解消는 우리민족이 自主的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責任意識의 환기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 ① 조순승, 『한국분단사』(형성사, 1982, 266면)
- 서론 / 전시외교의 유산 / 협력시도기 / 봉쇄정책기 / 참고문헌
- ② 조정원, “한반도 분단의 기원”, 『남북한 통합론』
(희성출판사, 1989), pp.33-54.
- 서론 / 일본에 의한 한국의 합병 / 한국의 독립운동 / 해방과 38선의 분단 / 미국 점령하의 남한 / 소련점령하의 북한 / 미·소공동위원회 / 유엔으로의 한국문제 이관 / 두개의 정부 탄생 / 결론
- ③ 정용길, “한반도의 분단배경”, 『분단국 통일론』
(고려원, 1988), pp.197-206.
- 분단요인에 관한 제논의 / 한반도의 분단과정 / 분단의 성격
- ④ 김학준, “한반도 분단의 배경 및 분단의 잠정적 고정화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제와 국제정치』(박영사, 1975),
pp.13-68.
- 서론 / 분단의 사실적 배경 / 분단의 현실적 배경 / 미·소의 분할점령과 남북한 정권의 배태 / 모스크바 3상회의와 한국신탁통치안 및 미·소 공동위원회 / 한국문제의 UN이관 / 두개의 한국의 탄생과 한반도 분단의 고정화 /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남북한의 통일노력 / 한국동란과 그 의미 / 결어
- ⑤ 한승조, “정치대립과 민족화합-역사의 교훈”, 『한국 민주주의』
(형성출판사, 1984), pp.242-258.

-국권상실의 원인 / 자주적 광복의 실패 / 좌우익 대립과 남북
분단 / 발전 주도세력과 비판 저항세력 / 정치대립의 수렴과
민족화합

8. 『6.25戰爭』은 民族史上 유례없는 悲劇이었다. 이것은 어떤 名分, 어떤 理由로도 正當化 될 수 없으며,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6.25戰爭』은 분명히 北韓의 南侵으로 시작된 동족상잔의 비극이요, 이땅에 두번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反民族的 行爲였다. 따라서 그 어떤 명분도 민족상잔의 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6.25戰爭』은 그것이 곧 國際戰化 됨으로써 외세의 집단적 간섭을 다시 불러오는 빌미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6.25戰爭』으로 인해 우리 민족 모두가 겪게 된 苦痛과 損失, 個人的·民族的 발전기회의 상실이 얼마나 막대하고 심각한 것이었던가는 재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재삼 환기되어야 할 것은 『6.25戰爭』으로 인해 국제적으로는 우리 한반도가 東西冷戰의 전초 기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남북의 分斷을 固着시키고, 같은 민족 사이의 불신과 敵對感을 심화시킨 결정적 요인이 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教育에서 이 주제를 다루면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첫째, 이 전쟁이 우리 민족 모두에게 얼마나 큰 犠牲과 苦痛을 안겨준 것이었으며, 그 잔영이 오늘의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특히 戰後에 태어난 後世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6.25』가 주는 敎訓을 거울 삼아 한반도에 동족상잔의 비극과 전쟁으로 인한 참화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각오를 다짐케 하고, 이를 방지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여야 한다. 紛爭 解決 方式으로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민족과 인류에게 얼마나 큰 죄악이 되는가를 이해시키고, 平和的인 방법의 統一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나라 사이의 협력의 유대가 밀접해진 오늘날과 같은 國際關係 상황아래서는 어떠한 전쟁의 발발도 그것이 곧 國際戰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집단적 外勢의 介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여야 한다.

넷째, 한반도에서 戰爭再發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自主的 平和統一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평화를 지켜 나가는 길은 무엇보다도 평화를 파괴하는 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갖추는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줄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① 류재갑, “6.25전쟁과 북한의 통일정책”, 『북한의 통일정책』
(을유문화사, 1989), pp.57-98.

-머리말 / 북한 통일정책의 역사적 성격 / 무력투쟁노선의 준비 단계 / 전쟁에의 길 / 결론

② 김학준, “한국전쟁 문헌해제(상) : 한국전쟁의 기원을 중심으로” 『한국문제와 국제정치』(박영사, 1975), pp.69-94.

-문제의 초점 / 스탈린의 주도설 / 중·소의 음모설 /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설 / 수정주의자들의 한국전쟁 기원론

③ 하영선, “현대의 전쟁과 평화”,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청계연구소, 1989), pp.184-195.

-현대전쟁의 추세와 성격 / 1945년 이후의 미국의 군사정책 / 현대전쟁과 제3세계의 군사화 / 맺는말

④ 한국국방연구원 편, 『한국전쟁 40년과 한반도 안보위상』

(1990, 78면)

-한국전쟁의 재평가 및 교훈(김학준) / 한국전쟁시와 현재의 안보환경의 비교 평가(이기택) / 6.25전쟁과 한반도 전쟁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전망(온창일)

⑤ 하영선 편,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나남, 1990, 480면)

-냉전과 한국(하영선) / 해방과 한국의 세계체제 편입(안병길) / 이승만의 남한단독정부수립노선(전진호) / 한국전쟁 직전의 주한미군 철수(이원덕) / 한국전쟁의 원인(최광녕) / 한국전쟁의 초기전개과정(서주석) / 한국전쟁의 종전과정(채용기) / 북한의 한국전쟁 해석(하영선)

⑥ 김학준, 『한국전쟁』(박영사, 1989, 369면)

—한반도의 분단과정 / 한국전쟁의 기원 / 한국전쟁의 개전에 관한 북한 정치파벌의 입장 / 한국전쟁의 시기에 있어서 남북한 각자의 동맹국들과의 관계 / 한국전쟁기간에 제기된 휴전안들의 내용과 그 의미 / 한국 정전협정의 성립과정 / 한국전쟁이 국제정치와 남북한에 미친 영향

9. 南北 分斷狀況의 오랜 持續은 民族成員의 個人的 苦痛과 不便은 물론, 南北韓 民族社會의 異質化를 심화시키고 民族史의 方向을 歪曲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民族繁榮을 가로막는 심각한 障礙要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分斷은 하루속히 克服되어야 한다.

조국의 分斷은 오늘날 우리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生活領域과 意識構造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족사적 사건이다. 이것은 일제의 침략과 민족의 해방, 민족의 장래에 대한 좌·우익의 대립, 첨예한 동·서 양진영의 대치와 대결, 한국전쟁의 발발, 남과 북간의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경쟁 등을 배경으로 하는 일련의 歷史的 事件의 결과이며 원인이 되는 것이다.

南과 北의 분단은 개인과 국가, 그리고 우리 민족 모두에게 큰 고통과 손실을 가져다 주고 있다. 1千萬 離散家族들에게는 혈육 이산의 아픔과 망향의 한을 안겨주고 있으며, 民族成員 모두에게 는 갖가지 불편과 자유를 제약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분단은 民族的으로 볼 때 불필요한 南北의 競爭과 軍事的 對峙, 자원의 분할사용 등으로 막심한 민족역량의 낭비와 손실을 초래케 하고 있다.

이밖에도 상이한 理念과 體制下에 장기화된 분단은 우리 민족 사회의 異質化를 심화시키고 民族史의 方向을 歪曲 變질시켜 왔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우리 전통문화와 역사를 낡은 시대의 유산이라 하여 말살하고 이른바 ‘社會主義的 革命文化’를 인위적으

로 정착시키려 노력해 온 北韓 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주제의 교육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첫째로 南北分斷과 분단상태의 장기화가 오늘에 결과하고 있는 이같은 부정적 현상들과 個人的 民族的 損失과 病弊들을 구체적으로 인식케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民族的 意志를 환기시켜 주는 일이 중요하다.

둘째로 분단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남북의 천만에 가까운 離散家族과 失鄉民들의 처지를 같이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離散家族 問題의 조속한 해결을 민족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다.

셋째로 분단의 지속이 앞으로 우리 민족 모두에게 가져다 줄, 민족사회의 異質化의 심각성과 民族史의 歪曲등을 상기케 하여 이를 하루빨리 극복해 나가는 것이 유구한 民族史的 觀點에서 우리 세대의 歷史的 責任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 ① 한승조, “분단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남북분단의 극복과 평화』(고대 평화연구소 편, 법문사, 1990), pp.36-67.
- 머리말 / 남북한 대립과 통일안보외교 / 정치·경제적 영향 / 사회·문화적 영향 / 맺는말
- ② 서진영, “분단과 냉전, 그리고 북한체제의 형성과 변화”, 『남북

분단의 극복과 평화』(고대 평화연구소 편, 법문사,
1990), pp.68-107.

- 머리말 / 해방정국과 김일성정권의 형성 / 한국전쟁과 북한체
제의 변화 / 주체사상과 북한체제의 변화 / 북한은 어떻게 변
할 것인가

③ 김학준 외, 『남북의 생활상』(박영사, 1986, 340면)

- 한반도 분단 40년 / 삶의 과정 / 삶의 양식 / 삶의 환경 / 분단
극복을 위하여

10. 北韓社會의 實相과 그 變化의 趨勢를 올바르게 파악한다는 것은 統一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北韓은 겨레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統一을 이룩할 相對方이기 때문이다.

분단이후 북녘땅의 주민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또 오늘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政治·經濟·社會·文化 등 각 분야에 걸친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통일의 상대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동포로서의 紐帶感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北韓體制의 變化可能性과 그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일은 統一을 主導的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統一 以後까지를 전망하여 예상되는 난제에 對備하는 일이 된다.

오늘의 北韓社會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主體思想이란 독특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것이 남북사회 뿐만 아니라 南北韓關係에 작용하는 逆機能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특별한 관심이 두어져야 한다.

향후의 통일교육에서는 南北韓 社會現象의 비교를 통해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피교육자에게 확인시키려 노력하는 것 보다는 오늘의 북한사회가 처하고 있는 각 분야 중에서 앞으로 統一을 추진해 가는 過程과 統一以後의 삶에 근원적으로 장애가 될 요소

와 問題點들이 무엇인가를 발견케 하고 이에 대한 對備策을 찾아 보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밖에 교육의 현장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첫째, 北韓社會 내에도 다양한 세력들과 社會的 葛藤이 존재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內在的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과,

둘째, 북한사회에 살고 있는 住民의 生活相을 올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 외형적 모습 보다는 삶의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

셋째, 北韓社會의 實相을 알려줌에 있어서 우리 사회와 달라진 모습에 초점을 두는 것 보다는 북한사회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民族의 同質的 要素를 발견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에서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 발전시켜 나갈 방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며, 同質性 回復에 근본적으로 장애가 되는 요소를 해결해 나갈 방안도 생각해 보게 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 ① 서진영, “분단과 냉전, 그리고 북한체제의 형성과 변화”, 『남북 분단의 극복과 평화』(고대 평화연구소 편, 법문사, 1990), pp.68-107.

- 머리말 / 해방정국과 김일성정권의 형성 / 한국전쟁과 북한체제의 변화 / 주체사상과 북한체제의 변화 / 북한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② 최 명 편, 『북한개론』(을유문화사, 1990, 671면)

- 총론 / 정치체제와 정치문화 / 사회주의 경제건설 / 사회문제와 복지제도 / 교육과 문화 / 대외관계와 정책

③ 통일원 정보분석실, 『북한개요』(1992, 571면)

- 지리 / 정치 / 경제 및 과학·기술 / 사회 / 문화 / 외교 / 군사 / 통일 / 자료

④ 강정구 편, 『북한의 사회』(을유문화사, 1990, 307면)

- 구조와 변동 / 민중생활

⑤ 김갑철, “북한통치이데올로기(주체사상) : 그 형성과 기능”, 『북한공산주의 이론과 실제』(문우사, 1984), pp.141-210.

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북한체제연구』(고려원, 1987, 577면)

- 정치·외교 / 경제·과학기술 / 사회·문화 / 군사 / 공산화 전략 / 전망

11. 統一問題와 安保問題는 그 性格上 엄연히 區分되는 問題이면서 不可分의 關係를 갖고 있다. 統一問題가 民族의 將來를 내다보는 問題라면, 安保問題는 現實로 當面해 있는 우리의 價値體系와 삶 의 與件을 지키는 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統一을 이룩하려는 努力과 더불어 國家安保를 튼튼히 하는 努力을 잠시도 게을리 할 수 없다.

우리는 統一을 보다 나은 민족적 삶 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正當化 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일에 南北韓 同胞들도 같이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장래의 장미빛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價値體系와 삶 의 여건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다. 우리는 현재의 삶 의 여건을 바탕으로 좀 더 나은 理想的 社會로 발전해 나가는 데 북한 의 동포들과 같이하고자 하는 것이다.

安保問題란 現존하는 우리의 價値體系와 삶 의 여건을 위협하는 모든 對內外的 도전요소로 부터 安全保障을 유지하는 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남과 북이 대결과 적대의 관계를 벗어나 和解와 協力을 추구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에서 뿐만 아니라 統一을 이룩한 以後에 있어서도 安保의 問題는 여전히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의 國家安保政策은 그 대상범위를 ‘國家의 存立과 安寧秩序를 위태롭게 하는 요소’에 국한시켜 왔다.

그러나 새로운 統一指向時代를 맞아 이러한 국가안보 개념은 좀 더 포괄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國家安保政策의 새 개념

에는 ‘統一의 成就를 威脅하는 要素와 統一된 民族國家의 發展 保護’라는 내용까지를 포함하는 보다 광의적인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확대된 安全保障觀 아래 우리의 ‘國家安保’는 北으로 부터의 위협에 대응해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統一에 근본적인 障礙가 되거나 그 성취를 위협하는 현존하는 요소의 除去와 그 발생의 豫防을 의미하는 ‘統一安保’라는 보다 높은 차원을 지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安保意識의 강조는 統一意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측면의 균형있는 강조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특수한 狀況과 國家目標의 二重性, 즉 북한을 상대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주된 대상으로 북한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분단상황하의 南北關係가 띠고 있는 特殊性을 설득력있게 설명해 줌으로써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① 노경수, “1990년대 초강대국과 동아시아: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함의”,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통일원, 1990), pp.5-27.
- 초강대국 안보관계의 변형 / 1990년대의 동아시아 안보환경 / 남북한 대처와 안보전망 / 결론

- ② 조용남, “통일의 전단계로서 안보공동체 형성 논의”,
『민족통일의 모색』(통일원, 1990), pp.110-159.
-서론·문제의 제기 / 통일의 전단계로서 안보공동체 / 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 안보 및 통일정책
- ③ 이호재 편, 『한반도 평화론』(고대 평화연구소, 연구논총 제1집, 법문사, 1989, 490면)
-한국인의 평화철학 모색 / 평화의 사회과학적 접근 / 한반도 평화의 환경과 조건
- ④ 신정현·백종천, 『국가안보론』(일신사, 1984, 494면)
-국가안보의 이론과 정책 / 국가안보와 국제적 갈등 / 국가안보와 국제적 협력 / 국제안보의 제분야 / 한국의 안보상황
- ⑤ 백종천·이민룡, “남북합의와 총체적 안보론”,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14호)』(통일원, 1992), pp.228-263.
-문제의 제기 / 안보이론의 발전방향 / 총체적 안보론의 개념과 내용 / 총체적 안보체계의 구조와 기능 / 결론
- ⑥ 구영록 외, 『남북한의 평화구조』(법문사, 1990, 504면)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의 국제환경 /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체제와 한반도 / 한·미 군사관계의 새로운 방향 모색 / 한·일 안보관계 / 한·미 안보협력과 군사기술 이전 / 소련·북한 군사관계 / 중국의 대북한 군사정책 / 공산권 외교의 등장과 전개 / 남·북한 무력갈등과 새로운 대안 / 남·북한 평화체제의 접근방법 및 방안 / 결론

12. 北韓의 『南朝鮮 解放論』에 입각한 對南 革命戰略은 平和統一의 성취에 가장 큰 障礙要因이다.

北韓이 지난 40여년간 집착해 온 이른바 『南朝鮮 解放論』은 ‘南朝鮮’이 ‘美帝’의 식민지적 지배하에 놓여 있다는 현실왜곡적 편집과 시대착오적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階級解放論』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南朝鮮 解放論』의 핵심은 남한사회에서 공산주의자나 이에 동조하는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階級革命을 일으켜 ‘美帝’를 몰아내고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립된 체제는 北韓 共產主義體制로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북한이 『南朝鮮 解放論』과 이에 기초한 對南革命戰略은 오늘의 남북한 현실과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전혀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다만 북한 내부의 體制維持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이같은 망상에 매달려 있는한 한반도에는 항상 긴장과 불안이 조성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때문에 ‘威脅과 對應’이라는 악순환이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지배해 온 것이다.

이제 남북간에는 세계적인 開放과 協力の 조류속에 『南北基本

『合意書』의 채택을 계기로 화해와 협력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平和속에 共存 共榮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관계의 모색에 있어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북한측이 지금까지 고집해 온 對南赤化革命戰略을 포기 할 것 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南과 北이 진정으로 和解하고 交流·協力하는 가운데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통일에 접근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걸림돌이 우선 제거되어야 한다. 對北關係에서 폭력적 방법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 平和的 統一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지난 60년대 이후 수없이 표명되었고 또 확인되어져 왔다. 남북문제는 『南北基本合意書』 제1장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측이 ‘相對方의 體制를 破壞, 顛覆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나가겠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교육·홍보의 주제로서 이 주제를 다룰 때에는 北韓의 對南 革命戰略에 내포되어 있는 북측의 기도와 그 危險要素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과 함께 북한측이 이러한 對南戰略 路線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이전 東·西獨 關係의 경우 동독은 폭력적 수단에 의한 대서독 전복기도의 포기를 일찍부터 천명함으로써 서로가 체제전복의 위협으로 부터 벗어나 實質的인 關係改善의

길을 열어갈 수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① 이상우, “남북한 통일정책의 논리구조 비교”, 『통일한국의 모색』(이상우 외 9, 박영사, 1987), pp.98-128.
- 서론 / 분단국 재통일의 문제 / 남북한 통일정책의 기본성격 / 남북한 통일정책의 상이점 / 남북한 통일정책의 평가
- ② 김학준, “정치적 통합방안으로서의 연방제”, 『통일한국의 모색』(이상우 외 9, 박영사, 1987), pp.233-257.
- 머리말 / 연방제에 관한 일반이론 / 1960년대의 북한의 연방제 제안 / 1970년대 남북대화기의 북한의 연방제 제안 / 1980년대 북한의 연방제 제안 / 맺음말
- ③ 박창희, “인민민주주의 혁명론과 북한의 통일정책”, 『북한의 통일정책』(을유문화사, 1989), pp.225-252.
- 머리말 / 인민민주주의의 개념 /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론 / 북한의 통일정책 / 맺는말
- ④ 김학준, “통일정책 : 지속성과 변화추세”, 『북한 40년』(이상우 외 6, 을유문화사, 1989), pp.521-582.
- 머리말 / ‘민족해방 전쟁론’에 입각한 북한의 통일정책 / ‘평화 통일론’에 입각한 북한의 통일정책 / ‘삼면혁명론’에 입각한 북한의 통일정책 / 대화·대결 병행기의 북한의 통일정책 / 세습 체제 공식화 시기의 북한의 통일정책 / 맺음말

13. 自由와 人權의 尊重은 모든 人類가 추구하는 普遍的 價値이다. 北韓 住民에게도 自由와 人權은 尊重되어야 하며, 이를 추구하는 것은 民族成員 모두의 責任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基本 條件으로서 필요한 自由와 人權을 保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정치체제나 이념 아래에서도 正當化되는 天賦的 權利이며, 어느 것과도 대체될 수 없는 基本權利의 하나이다.

個人的 自由의 확대와 人間 尊嚴性의 保障은 온 인류가 지금까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현대의 모든 국가에서는 기본적 인권을 基本法(憲法)으로 保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각기 자국민들에게 基本的 人權을 保障해 줄 것을 헌장상의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다.

北韓 역시 우리나라와 함께 인권의 保障을 요구하는 UN 헌장을 비롯한 여러 국제적 條約과 協定에 加入하고 있다. 最近들어 社會주의 國家들에서조차 自由와 人權의 폭을 넓혀 나가기 위한 民主化와 開放化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北韓의 住民들이 아직도 ‘居住이전의 自由’와 ‘표

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에 월남한 많은 인사들과 國際人權機構 등에 의해 거듭 확인되고 있다.

北韓의 同胞들에게 人權을 保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같은 민족으로서 이땅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워진 당연한 責任이며, UN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기구와 협정들에 같이 가입하고 있는 회원국의 하나로서 국제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정당한 權利가 되는 것이다.

통일교육의 주제로서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북한주민들에게 기본적인 人權을 保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주장은 북한의 내정을 굳이 간섭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民族共同體의 삶을 함께 해 나갈 북한 동포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복된 삶을 보장해 줄 것을 희망하는 同胞愛의 발로가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참고문헌】

- ① 평화문제연구소, 『북한의 인권백서』(1991, 168면)
- 법으로 본 북한의 인권 / 국제인권기관이 조사·보고한 북한의 인권 / 내가 체험한 북한의 인권 / 북한 노동자의 인권실태
- ②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북한의 인권』(1989, 247면)

- ③ 송철복 역, 『북한의 인권』(고려원, 1990, 271면)
*아시아 감시위원회 미네소타 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저)
- ④ 연합통신, 『행복도 강요되는 땅』(1991, 476면)
-궁핍한 주민생활 / 북한과 김일성 왕조 / 연합통신기자가 밟은
북녘땅 / 김현희가 폭로한 북한실상
- ⑤ 란코프, 『평양의 지붕밑』(연합통신, 1992, 226면)
*소련 레닌그라드 대학 란코프 교수의 북한생활 체험기
- ⑥ 정경섭 역, 『병영국가 북한』(동아일보사, 1991, 207면)
*한스 마레츠키(마지막 평양주재 동독대사)의 북한생활 증언
- ⑦ 이흥구, “자유사회의 이념과 다가올 통일국가”, 『민족과 자유
의 이념』(백용현 외 9, 고려원, 1987), pp. 167-204.
-우리들의 이상 / 자유와 민주를 보는 시각 /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신념 / 국가이념과 민족통일의 문제 / 민주발전을 위한
지평 / 개인적 자유와 민족적 자유 / 내일을 위한 오늘의 과제

14. 分斷된 民族社會의 開放과 交流는 民族共同體의 삶을 回復·發展시켜 나가는 基本條件이다. 따라서 닫혀있는 北韓社會는 마땅히 開放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상호개방과 호혜적인 交流와 協力を 통하여 복지증진의 길을 함께 걷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상호개방과 협력의 확대가 자국의 국가적 이익뿐 아니라 世界平和와 인류의 繁榮, 발전에 寄與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고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世界史的 潮流에 발맞추어 완전한 통일이 되기 이전이라도 남북간에 막혀있는 담을 헐고 交流와 協力を 증진해 나감으로써 사회, 문화, 경제등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共同體의 삶을 회복하고 共存, 共榮을 이룩해 나가자는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사실상 남북간의 開放과 交流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차단되었던 民族的 一體感을 복원시키는 것이며, 이는 나아가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開放과 交流를 통하여 북한체제를 몰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함께 共存·繁榮하면서 마침내 하나의 民族的 同質意識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가교를 놓자는 것이다.

또 北韓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지금까지 고집해 온 폐쇄노선을 버리고 사회를 제한적으로나마 開放하는 것이 오늘에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활로가 되는 것이다. 사회의 개방 없이는 가장 필요로 하는 선진기술이나 외국의 자본을 도입할 수도 없다. 또 ‘우리 식대로 살자’는 政治思想的 統制와 宣傳 선동만으로는 바닥에 떨어진 노동의욕을 고취할 수 없어 생산성을 높힐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北韓社會의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남과 북이 더불어 살아가는 民族共同體에 북한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기 위한 것이지 북한측이 염려하는 것처럼 북한사회를 혼란에 빠뜨려 이른바 서독식 ‘吸收統合’을 도모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사회가 오늘까지도 대내외 폐쇄정책을 고수하면서 ‘우리 식대로 살자’는 구호 아래 政治思想的 住民統制를 강행하고 있는 이유를 교육현장에서 확실히 규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애로와 고민을 우회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며, 北韓社會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예측케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지금 남북간에 開放과 交流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北韓體制는 그 폐쇄성으로 자멸·붕괴될 수 밖에 없는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北韓 지배자들로 하여금 무모한 軍事行動으로나 또는 對南暴力手段의 사용과 같은 반민족적인 행위를 낳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점에서도 남북간의 開放과 交流 協力은 이 땅에 平和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① 정용길, “동서독 교류의 실태”, 『분단국 통일론』(고려원, 1988), pp.22-84.
- 동서독 교류의 실태 / 각종 교류의 문제점 및 해결실태 / 맺음말
- ② 이태욱, “경제 : 자력갱생 정책의 이점과 한계”, 『북한 40년』
(이상우 외 6, 을유문화사, 1989), pp.111-228.
- 서론 / 북한의 경제체제, 기본경제정책 및 경제운동 / 계획경제의 전개과정과 그 성과 / 북한경제의 대외 개방화 정책 / 종합평가와 전망
- ③ 최상철, “남북교류협력 유도방안에 관한 연구”, 『민족통일의 모색』(통일원, 1990), pp.160-246.
- 서론 / 남북교류협력의 이론적 배경 / 남북교류협력 유도전략 / 분야별 남북교류 협력 유도방안 / 결론
- ④ 통일원, 『독일통일과 한반도』(1991, 219면)
- 동서독 통일실현 과정의 점검 / 남북한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 ⑤ 유석렬, 『공산권 개방과 북한의 고민』(다나, 1990, 140면)
- 공산권의 변혁과 북한의 태도 / 북한은 언제까지 문을 닫고 있을 것인가 / 북한의 경제사정과 개방의 필요성 / 체제유지와 경제난 극복, 이율배반의 고민 / 북한의 선택

15. 北韓 住民은 우리와 함께 같은 共同體를 이루어 살아가야 할 같은 民族社會의 構成員이다. 그러나 현재의 北韓 政權은 우리의 生存과 安寧을 威脅하는 實體이다.

휴전선 이북의 北韓 住民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갈라져 있는 또 다른 한쪽으로서 언젠가는 함께 살아야 할 대상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安保를 끊임없이 위협해 온 실체이기도 하다. 때문에 북한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同伴者가 되는 동시에 방심할 수 없는 警戒의 대상이 된다. 한 때 우리는 反共, 勝共, 滅共 등의 용어들에서 표상되어 왔듯이 북한이란 대상을 위협의 측면만을 강조하여 보아왔다. 그러나 이제 南과 北은 대결과 반목을 벗어나 화해와 협력을 증진해 나가며, 평화속에서 共存·共榮을 추구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北韓觀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바뀌어져야 한다. 우리정부는 지난 1988년에 발표한 『7.7宣言』에서 남북한은 더 이상 적대·대결하는 상대가 아니라 공동의 번영을 향해 협력해 가는 同伴者의 關係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북한을 하나의 民族共同體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한민족 構成員의 일원으로서 민족적 단합과 협력을 도모해 나갈 ‘共生·共榮’의 상대방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92년도 남북이 협의 채택한 역사적인 『南北基本合意書』에서는 남북이 함께 民族的 和解와 不可侵, 交流·協力을 실천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해 나갈 상대방으로서 平和統一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경주할 것을 前文에서 다

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곧 북한에 대한 경제심의 완전해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北韓의 住民은 통일을 함께 이룩해 나갈 동반자요 ‘共生·共榮’의 상대이지만, 완전한 통일이 이룩되지 않고, 北韓政權이 아직도 對南革命路線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되는 상대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고히 인식시켜야 한다.

北韓에 대한 환상적 시각과 함께 冷戰時代의 고정관념도 함께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북한으로부터 오는 安保上의 威脅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二重的 特殊狀況에 처해 있다. 이점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이해시켜 줌으로써 어느 쪽에도 크게 치우침이 없는 均衡的 시각을 항상 견지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에 대한 우리 입장의 二重的 特殊性은 우리들 자신으로 하여금 대단히 슬기로운 처신과 선택을 요청하고 있다. 북한이 단순히 같은 형제라는 인식이나 또는 하루아침에 손잡을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환상적이다. 北韓社會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를 동족으로서가 아니라 적대의 상대로 설정하여 왔으며, 남한의 타도를 北韓體制 존립의 目標로 삼아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올바르게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점에서 우선 우리 사회의 對北韓 認識의 구체적이고 일체적인 면이 드러나야 하며 슬기로운 민족통합의 행위양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와 함께 共同體를 이루어 살아가야 할 北韓 住民과 우리의 생존과 안녕을 威脅하는 실체로서의 北韓政權이 동일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 ① 민병천, “북한의 통일목표와 전략”, 『북한의 통일정책』
(을유문화사, 1989), pp.35-56.
- 머리말 / 통일의 목표 / 통일전략의 사상 / 혁명과 통일전선전략 / 맺는말
- ② 신정현 편, 『북한의 통일정책』(을유문화사, 1989, 463면)
- 남북분단에 대한 북한의 인식(양호민) / 북한의 통일목표와 전략(민병천) / 6.25전쟁과 북한의 통일정책(류재갑) / 제네바 회담과 북한의 평화통일론(조정원) / 민족해방론과 북한의 통일정책(김태창) / 김일성 주체사상의 본질과 북한의 통일정책(김갑철) / 인민민주주의 혁명론과 북한의 통일정책(박창희) /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전개와 목표(신정현) / 북한체제의 변화와 통일정책(이용필) / 한반도 군축과 북한의 통일방안(이석호) / 국제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통일정책(곽태환) / 북한 통일정책의 특성과 한반도 통일전망(정용길)

16. 南北韓은 UN을 포함한 國際社會의 責任있는 成員이다. 南北韓이 國際舞臺에서 서로 協力하며 民族 共同의 利益을 추구하는 것은 民族自尊과 統一의 成就에 크게 寄與하는 일이다.

南과 北은 지난 40여년 동안 동서로 나뉘어 대결, 대치해 온 이 데올로기적 冷戰體制에 각각 편입되어 국제사회에서 불필요한 競爭과 對決로 민족적 역량을 소모하고 민족적 위신을 실추시키는 일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최근 동서 양진영간의 냉전적 대결구조가 해체되고, 南과 北이 나란히 유엔에 加入됨을 계기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남북한의 UN同時加入은 남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대결을 사실상 종식하고 UN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國際協力の 주체적 당사자로서 지향해 나갈 것임을 만방에 약속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南과 北은 유엔을 비롯한 수많은 國際機構와 協約에 각기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기 100여개국을 넘는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國際社會의 책임있는 성원으로서는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제무대에서 앞으로의 남북한 관계는 쓸모없는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民族 共同의 利益과 민족의 尊嚴을 세워나가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南北關係의 모색에 대한 쌍방의 약속은 지난 1992년 2월 19일 남북간에 합의 발효된 『南北 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

協力에 관한 合意書』 제1장 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에는 민족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위상을 높여나가기 위해 南과 北이 국제사회에서 共同으로 努力하며 協助해 나가는 것이 왜 바람직하며, 그러한 결과가 남북관계의 다른 부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통일의 성취에 기여하는 바를 강조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지구촌 속에서 온 人類가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가운데 共同의 理想을 추구해 나가는 세계인으로서의 폭넓은 시야와 責任意識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눈앞에 다가온 21세기와 統一國家에서의 삶에 對備하는 것임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교육에서는 다가온 21世紀의 시대가 하나의 지구촌에 함께 삶을 살아가는 國際化 시대로서, 이 시대에 있어서는 普遍的 國際主義의 헤게모니가 지배하는 한편, 다른 면에서는 각 영역에서의 새로운 民族主義의 부활을 보여주게 될 것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게 된다. 즉 민족의식을 전제로 하는 국제주의의 보편성이 앞으로 시대성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南北의 문제는 먼저 民族의 차원에서 解決·克服되어야 할 당위를 안게 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① 양성철, “한반도의 UN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남북한 UN시대의 새출발』(자유평론사, 1992), pp.113-188.
-한반도와 UN관계의 재각성 / 남북한과 UN시대 / UN의 장에서 남북한이 해야 할 일들 / 통일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② 안병준, “남북한 UN가입후의 한반도”, 『남북한과 국제정치』
(이은호 외 13, 서울프레스, 1992), pp.83-96.

-UN가입과 냉전의 해소 / 남북한과 강대국간의 국교정상화 /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협력 및 통일과정 / 통일외교의 과제와 전망 /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③ 자유평론사, 『남북한 UN시대의 새출발』(1992, 236면)

-주변4강과 한국(이도형) / 한반도에 UN시대가 도래하기까지 (이도형) / 한반도의 UN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양성철) / 통일의 선결과제는 무엇인가(양성철)

17. 世界의 대부분 國家는 편협한 이데올로기적 價値의 맹목적 추구보다는 個人의 自由와 人權, 그리고 福祉의 증진을 추구하는 새로운 人間主義的 이데올로기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동구 공산권 여러나라에 있어서의 民主化 改革과 소연방의 붕괴, 共產黨 解體등을 계기로 동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새롭게 재편된 오늘의 국제질서 속에서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은 지금까지 東西 冷戰構造 아래 매달려 왔던 편협한 이데올로기적 가치의 추구보다는 국민들에게 自由와 人權의 확대와 福祉의 증진을 통해 개인적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른바 人間中心主義的 이데올로기의 추구가 오늘의 시대적 조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人間中心主義的 이데올로기는 이전의 자유주의 대 공산주의와 같은 냉전체제적 대립논리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으로 각 개인의 人格的 尊嚴성과 自己實現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치사회로의 지향임을 의미하게 된다. 이점에서 인간중심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전체주의나 획일적인 권위체제를 거부하는 個人的 自我確立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탈이데올로기의 세계적 추세는 2차세계대전 후에 탄생한 대부분의 社會主義 國家들에서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이념노선의 추구 결과가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식생활 문제 까지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얻어진 歷史的 敎訓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에서의 탈이데올로기는 곧 脫冷戰體制的 이념을 의미하며, 인간의 삶을 정상적이고도 가치로운 것으로 복원시킬 수 있는 이념적 현실성을 전제하게 된다. 이점에서 이데올로기의 人間主義的 복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이같은 세계사적 조류 속에서도 구시대적 이데올로기의 굴레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채 세계에서 유일한 冷戰의 孤島로 남아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 남과 북 사이에 역사적인 『南北基本合意書』가 채택 발효됨에 따라 이 땅에서도 共存·共榮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려 하고 있다.

우리도 하루 빨리 冷戰時代에 길들여진 고루한 이데올로기적 대결의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민족성원 모두가 좀 더 많은 自由와 人權, 고른 福祉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겨루는 새로운 人間中心主義的 이념의 경쟁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이데올로기적 대결에 매달려 있는 한 온 인류가 和解와 協力の 새역사를 열어나가는 오늘의 시대적 조류에 부응해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平和統一의 길도 개척해 나갈 수 없게 될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의 理念教育은 첫째, 우리가 선택한 최선의 대안으로서 自由民主主義體制의 기본적 가치들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과 함께 이에 대한 도전적 이데올로기들의 이론체계가 가지고 있는 강약점들을 客觀的으로 批判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大學 이상의 共產主義 理論批判教育에서는 이미 역사적 사실로 실증된 이념적 허구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資本主義社會의 내재적 矛盾을 분석하고 공격하는 이론 무기로 우리 사회 내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革命理論의 정체를 밝혀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육소재로서 냉전적 이데올로기 의식의 지양을 강조하는 것이 모든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셋째, 南北間에 상존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對決意識이 앞으로 상호관계의 개선과 통일을 기해 나가는 데에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를 성찰케 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民族的 努力의 당위성을 확인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앞으로 통일된 민족사회의 발전에 견인차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역할이 새로운 형태의 共同體的 民族主義와 世界的 普遍主義의 人間觀의 실현에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 이는 곧 민족적 전통과 세계적 보편성의 합일화를 추구하는 이념적 모색임이 설명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① 노재봉, “통일한국에서의 복지”, 『통일한국의 모색』

(이상우 외 9, 박영사, 1987), pp.78-97.

-문제의 이해 / 현대적 양상과 문제 / 동·서의 문명사적 합일성 / 새로운 차원의 모색 / 새로운 복지상

② 안병영, “민족·통일 그리고 이데올로기”,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변론』(전예원, 1987), pp.323-449.

-분단상황과 통일논의의 현단계 / 민족이산의 정치사회학 / 교차승인과 남북한 관계 / 체제비교의 동학 / 마르크시즘과 현대공산주의 / 마르크스, 『자본론』의 증언 / 마르크시즘과 독일사회민주주의 / 동구제국의 자유화 운동 / 소련 경제개혁의 본질과 한계 / 제3세계의 사회주의 /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평등문제

③ 진덕규, “분단사회의 민족주의론”,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박영사, 1984), pp.107-158.

-브르쥬아 민족주의의 형성 /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의 도전 /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적 갈등 / 분단 민족사회의 통합 논리

④ 전 응, 『제3이데올로기』(전예원, 1989)

-서론 / 수렴이론과 사회현상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특징 / 전후 국제질서의 변천과정 / 동·서양 체제의 추구가치와 지향구조의 유사성 / 자본-사회주의간의 수렴패턴 / 결론

統一政策

18. 統一推進의 原則과 過程, 統一된 國家의 未來像에 대한 汎國民的 合意가 統一政策의 原動力이 된다.

모든 국민은 統一의 主體이며 主役이지만, 국민 각자가 가지고 있는 통일문제에 대한 생각과 지향하는 바는 각양 각색이다. 이같은 서로 다른 국민들의 생각과 뜻하는 바를 하나로 묶어 통일을 이루어 나가려는 종합된 의지의 표현이 국민 주권의 수임자인 정부가 수립 제시하는 統一政策과 方案인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광범위한 뜻을 수용하지 못한 정책과 방안은 기본 정책으로서의 正當性和 推進力을 함께 잃게 된다.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대부분 통일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統一의 原則과 어떤 過程을 거쳐 어떤 모습의 統一國家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세가지로 집약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통일된 국가의 양태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통일과업에 임하는 민족성원 모두의 뜻과 정열을 결집시켜 나갈 이상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가지 핵심 요소들은 統一에 관한 대부분의 基本政策이나 方案에 함께 수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의 統一方案도 이러한 統一의 原則과 過程, 그리고 統一國家의 未來像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北韓의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이 담고 있는 내용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을 정확히 알게하고, 과연 어느 방안이 민족 전체가 염원하는 統一像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것이 統一敎育의 일차적 課題가 되는 것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적절한 國民的 合意의 절차를 거쳐 일단 정부의 統一政策으로 확정된 것은 전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國民的 合意란 각종 여론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견해와 의지를 수렴하고 이를 집약 반영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같이 民主的인 節次를 통해 수립된 특정의 統一方案이나 政策方向은 자신의 개인적 소신이나 소속 집단의 주장과 다르다 해서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만약 그와같이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國民的 合意基盤을 파괴하는 일이며, 통일정책의 추진에 위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民主國家에서 모든 정책 추진의 원동력은 결국 國民的 合意에서 발원하는 것임을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① 서진영, “통일논의와 국민적 합의기반의 확충”,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국토통일원, 1990), pp.173-185.

-문제의 제기 / 왜 정부의 통일정책은 불신이 되는가 / 제6공화국에서 통일논의의 성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 통일논의의 통일은 가능한가 / 결론

② 김용제, 『한반도 통일론』(박영사, 1990, 215면)

-서론 / 통일의 이론적 제 측면 / 통일의 실제적 제 측면 / 통일에 대한 장래의 전망 / 결론

③ 국토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 67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구도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현을 위한 세부정책 구상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주요현안 문제와의 관계

19. 南北分斷의 克服을 위한 統一政策은 合理的이고 實現可能하며 全體的 合意를 바탕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民族的인 正當性에 입각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을 실현시켜 나갈 방법과 방향을 정하는 統一政策이나 統一方案에 대한 평가는 각자가 지니는 역사의식, 내외 정세관, 신념체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통일정책이 가장 올바른 것인가는 적어도 다음 네 가지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첫째는 合理性이다. 제시된 統一政策이나 方案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 나가야 할 도리와 이치에 맞는 것이며,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 할 이상에 비추어 올바른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이다.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은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 정책은 적어도 合理性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둘째는 現實性이다.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한 목표나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외 상황이나 여건에 비추어 실제로 實現될 可能性이 없는 政策이나 方案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반대로 비록 하찮고 작게 보이는 일이라도 南北이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는 현실성이 있는 것이라면, 남북한간의 信賴構築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셋째는 全體的 合意性이다. 통일추진을 위한 특정의 政策이나 方案의 내용이 사회 각 계층, 나아가서는 全體 成員의 의사를 어느 만큼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가를 가늠하는 것이다. 어떤 통일방안이나 정책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특정계층이나 집단의 제한된 의견이나 이익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민족 전체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없다. 광범한 民族 構成員의 支持와 聲援이 있을때만 그 統一政策은 강력한 推進力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民族的인 正當性이다. 통일정책이 추구하는 目的이나 方向, 그리고 方法이 우리 민족 전체의 발전과 번영에 배치되는 것이거나 민족 전체의 의사를 결집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民族的인 正當性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남북간에는 각자가 제시한 統一方案(南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北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놓고 치열한 正當性 공방이 계속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統一政策이나 남북한의 統一方案을 평가할 수 있는 合理的 基準을 제시해 주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그것의 妥當性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일은 앞으로의 統一教育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統一政策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은 통일

추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과 논리를 반박 또는 수용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合理性, 現實性, 全體的, 合意性, 民族的인 正當性을 모두 담은 통일정책만이 비로소 남북한 어느 측도 반대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 ① 국토통일원 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1990, 185면)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책기조와 실천방향(이홍구)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김학준) / 남북한 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체 형성 이론(김종림)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사회적 측면(고영복)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념적 측면(전인영)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책적 측면(김갑철) / 남북연합의 제도적·실천적 과제(김명기) / 통일논의와 국민적 합의기반의 확충(서진영)
- ② 양호민 외, “통일-어떻게 되어갈까”,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나남, 1992), pp.143-236.
- ③ 양성철 편, 『남북통일 이후의 새로운 전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9, 558면)
 - 분단이론의 정립 / 학문외적 통일논의 총점검 및 새정책 방향 모색 / 학문내적 통일논의 총점검 및 새 이론방향 구상 / 남북

한 분쟁연구 총점검 및 새 연구방향 모색 / 남북한 통일협상
모델의 새 시도 / 남북한 협상조건의 이론적 연구 / 통일정책
결정요인의 분석

20.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韓半島 分斷現實과 오늘의 時代的 狀況과 潮流에 부합하는 가장 現實的인 代案이다.

분단 이래 지금까지 南과 北은 통일을 최대의 “民族的 課題” 또는 “최상의 國家政策 目標”로 표방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각기의 統一方案을 내세워 왔다.

지난 1989년 9월 11일 발표된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서로 다른 體制와 理念 속에서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동안 살아온 남북사이에 쌓여진 불신과 적대감을 씻고, 훼손된 民族的 同質性을 회복하여 7천만 민족 모두에게 自由와 人權, 幸福이 함께 보장되는 통일된 民主國家를 건설해 나가는 基本原則과 過程, 지향해 나갈 目標를 밝히고 있는 平和統一의 基本章典이다.

통일교육의 모든 과정에서 이 통일방안의 合理性, 現實性, 國民的 合意性, 民族的 正當性을 구체적으로 해명해 줌으로써 그 타당성과 정당성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北韓이 주장하고 있는 聯邦制 統一方案을 설명하고 이 방안이 안고 있는 問題點과 策略性을 지적하고 같은 기준에서 왜 연방제가 타당성이 없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 통일방안의 현실적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의 통일방안을 이해시킴에 있어서는 특히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중간단계에서 民族統一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잠정체제로서 ‘南北聯合’의 필연성과 이것이 北韓側이 주장하는 ‘聯

邦制'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확연하게 규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한의 현 분단상황에서 신뢰구축과 평화체제를 위한 中間過程이 왜 필요한지, 이러한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통일에 이른다는 것이 왜 비현실적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民族共同體 形成’이라는 통일의 중간과정을 설정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민족사회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民族統一’이 전제되지 않고는 ‘國家統一’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스럽지도 않다는 정책인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그동안 서로 理念과 體制를 달리한 가운데 반세기 가까운 오랜 세월을 서로 갈라져 살아온 탓으로, 원래 하나였던 민족이 마치 이방인을 대하는 것과 같이 異質感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한 생활양식이나 보고 느끼는 감정과 생각까지 서로 달라지게 됨으로써 민족사회가 남북한간에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둔 채 하나의 정부만을 세운다고 해서, 즉 政治적으로 統合된다 하여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방안에서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국토와 행정구역, 정부를 하나로 묶는 외형상의 통일에 앞서 달라져 가는 민족사회를 하나로 잇는 실질적 통일의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는 뜻에서 民族共同體 回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 주제에서는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모든 對內外 政策과 對話戰略들이 우리의 기본 통일장전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

안』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있음을 알게 하고, 統一政策의 추진에 관련된 國內外的 環境與件과 조건들의 유기적 관계와 그 영향력을 정확히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또한 모든 정책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統一方案이나 統一政策의 變更 可能性도 함께 시사되어야 한다. 현재의 통일 정책이나 방안은 오늘의 내외 환경이나 여건을 감안한 최선의 대안인 것임을 지적하고, 狀況變化에 대응한 대책과 방침의 변경이 政府 政策의 혼선이나 무원칙으로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야 한다.

【참고문헌】

- ① 김학준, “정치적 통합방안으로서의 연방제”, 『통일한국의 모색』 (이상우 외 9, 박영사, 1987년), pp.233-257.
- 머리말 / 연방제에 관한 일반이론 / 연대별 북한의 연방제 제의 : 그 내용과 평가 / 맺음말
- ② 국토통일원 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1990 185면)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책기조와 실천방향(이흥구)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김학준) / 남북한 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체 형성 이론(김종림)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사회적 측면(고영복)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념적 측면(전인영)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책적 측면(김갑철) /

남북연합의 제도적·실천적 과제(김명기) / 통일논의와 국민적
합의기반의 확충(서진영)

- ③ 김하룡, “남북한 통일방안 수립의 기본입장 비교”, 『남북
분단의 극복과 평화』(고대 평화연구소 편, 1990),
pp.172-207.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의 비교기준 / 남북한 체제의 기본성격
과 통일방안의 특징 / 차이의 극복과 남북관계의 진전 가능성

- ④ 황성모 외, 『민족의 정통성과 통일』(자유평론사, 1991, 161면)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 조명 / 남북한도 협력과 화합의
시대 / 남북한의 통일방안과 우리의 노력 / 2000년대를 향한
통일의 이정표

21. 南北韓 社會의 同質性은 유구한 民族史的 文化傳統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民族的 同質性이 우리 民族을 하나로 묶고 있는 연결고리이며, 統一을 추진하는 原動力이 된다.

우리 民族의 同質性은 반만년간 하나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해 오면서 형성된 민족고유의 文化傳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은 南과 北으로 분단된 오늘에서도 우리 민족이 어디에 있던 민족성원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고 결집케 하는 연결고리가 되고, 갈라져 있는 民族의 統一을 추진하는 原動力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의 동질성은 해방후 民族交流의 단절이 초래한 固有文化傳統의 異質化로 말미암아 적지않게 파괴되고 훼손되어 있다. 반세기 가까운 세월동안 서로 다른 體制와 理念 속에서 살아온 남북한과 해외동포들 사이에는 價値觀과 思考方式, 生活方式 면에서 적지않은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民族文化傳統의 이질화가 계속 방치되어 南과 北의 주민과 해외동포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單一共同體 意識이 완전히 상실되는 경우, 이땅에는 서로 다른 별개의 공동체가 영구히 정착되고 말 것이며, 갈라진 민족의 통일을 추진할 명분이나 당위도 잃게 되고 만다.

이같은 民族史的 危機를 근본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길은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루어 분단된 민족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사회의 완전한 통합이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상황하에

서 統一 以前이라도 날로 심화되어가는 남북간의 사회, 문화분야에서의 異質化 현상을 豫防하고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은 서둘러 경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번 이질화된 價値觀과 文化體系의 同質化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民族的 同質性을 회복하는 일은 갈라진 民族 社會의 실질적인 統合을 위해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統一以後의 共同體의 삶을 위해서도 긴요한 과업의 하나가 된다.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同族意識을 키워나가고 동족간의 이질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첩경은 南北 상호간에 交流를 촉진해 나감으로써 文化 傳統의 공유부분과 民族的인 紐帶感을 넓혀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성원 사이의 自由往來와 빈번한 접촉을 비롯한 社會·文化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交流와 協力을 통해 민족성원 모두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우리 民族 文化意識과 價値觀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잃었던 民族的 일체감과 同族意識이 되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다 활발한 교류와 접촉을 위하여 南北韓은 먼저 상대방의 實體와 存在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며, 서로가 처하고 있는 입장과 가치관에 있어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교육의 주제로서 이 문제를 다룰 때에는 궁극적인 통일에 앞서 남북간의 다각적인 對話와 交流 및 協力の 증진을 통해 민족사회의 통합기반을 하나씩 다져나가고자 하는 우리 統一政策 기조의 現實性和 合理性을 상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

- ① 김정배 편, 『북한이 보는 우리 역사』(을유문화사, 1989, 287면)
 - 북한 '주체의 역사관'의 사상적 빈곤(신일철) / 한민족 본토기 원설과 진국의 고대국가설(김정배) / 고조선과 3국의 역사에 대한 연구동향(노태돈) / 통일신라에 대한 <조선전사>의 서술과 그 비판(신형식) / 북한의 고려시대사 서술(박용운) / 북한에서의 김옥균 연구(이광린) / 북한이 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현희) / 8.15해방과 남북한 공산주의(김창순) / 조·소 분쟁과 북한역사(서대숙)
- ② 고병익 외, 『문화전통과 사회발전』(미원문화재단, 1991, 424면)
 - 한국학 연구의 발전방향 / 문화전통과 한국인의 정체성 / 한국의 사회발전과 문화전통 / 한국의 문화전통과 정치발전 / 문화전통과 행정문화 / 문화전통과 통일의 과제 / 전통과 법질서 / 문화전통과 기업문화 / 한국사회의 노동문화 / 문화전통과 교육문화 / 문화전통과 생활문화 / 문화전통과 문화발전
- ③ 국토통일원, 『분단국가의 문화통합』(1989, 213면)
 - 종교와 체제통합 / 언어와 체제통합 / 예술과 체제통합 / 정치

문화와 체제통합

- ④ 진덕규, “한국민족주의의 새로운 지평”, 『민족과 자유의 이념』
(박용현 외 9, 고려원, 1987), pp.51-88.

-우리는 누구인가 / 우리 민족사를 보는 시각 / 민족정신의 뿌리 / 민족의식의 태동 / 민족국가의 형성 / 우리 민족정신사의 유산 / 형성민족주의의 요청 / 우리 앞에 놓인 과제

22. 南과 北, 그리고 全世界에 흩어져 살고 있는 海外同胞들이 모두 함께 한민족공동체를 構成하는 成員이며, 둘로 갈라져 있는 南과 北의 統一은 한민족공동체의 基盤을 공고하게 다져 나가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 민족은 신라의 삼국통일 이래 1300여년 동안 이 땅에 하나의 民族共同體의 삶을 유지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강요된 分斷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民族共同體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당연한 民族史的 召命이며, 재통일의 추진은 우리의 손으로 自主的으로 해결해야 할 전민족적인 최대 과업인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의 남과 북, 그리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7千萬 同胞는 같은 혈통, 같은 언어와 역사, 고유의 傳統과 文化意識을 함께 지니고 있는 한민족의 구성원으로서 각자는 그가 어느 곳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든 남다른 귀속의식과 끈끈한 정서적 紐帶感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우리는 같은 운명을 타고난 ‘하나의 民族’이란 의식에 기초하여 성립되는 이러한 民族共同體意識이야말로 민족을 하나로 묶는 끈이요, 갈라져 있는 남북한 주민을 다시 하나로 결합시키는 가장 큰 명분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民族共同體意識이야말로 온 민족을 통일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추진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통일은 이러한 民族共同體意識의 발양을 원동력으로 삼

아 남북으로 갈라지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의 성원들을 理念과 體制를 넘어 하나의 共同運命體로 통합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둘로 갈라져 있는 南北 사회의 統一은 잃었던 한민족공동체를 이 땅에 다시 이루어 굳건히 다져나갈 기반이 되는 것이다. 南北韓에서 하나의 民族共同體로서의 삶이 회복 발전되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전체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南·北韓에서보다 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한 세계 도처에 거주하고 있는 海外同胞들을 중심으로 한민족공동체의식이 다져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활용하여 민족전체가 共同體意識을 회복토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7천만이 한민족이라는 뿌리의식과 民族的 正體性을 확인해 주는 民族共同體意識 教育은 역사교육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한민족의 歷史와 傳統文化의 맥을 되찾아 보는 과정에서 특히 환기되어야 할 점은 北韓 공산정권하에서 자행해 온 歷史의 歪曲, 특히 金日成家系의 ‘革命傳統’을 날조해 내기 위한 現代史의 歪曲 결과가 우리 민족사에 어떤 해독을 남길 것인가를 성찰케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北韓의 우리 民族史 歪曲과 북한주민들에 대한 思想 教育의 결과는 앞으로 우리 한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南北間의 빈번한 交流와 접촉을 통한 同質化 작업과 함께 왜

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北韓社會 개방으로 주민들의 民主化 의식을 고양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 참고문헌 】

- ① 진덕규, “한국의 민족개념과 민족의 통합”, 『통일한국의 모색』
(이상우 외 9, 박영사, 1987), pp.44-77.
- 머리말 /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요구 / 민족개념의 일반적 논의 / 민족·민족국가·민족주의 / 한국사회의 민족문제와 통일 / 통합민족의 이념과 가치체계 / 마침말
- ② 김창순, “국민상 정립의 과제와 통일문화 창조”, 『통일문화 창조를 위한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년),
pp.127-148.
- 국민상 정립을 위한 기본사상 / 민족공동체의 재통일이념 / 통일문화의 창조운동과 과제

23. 『南北基本合意書』는 앞으로 南北關係의 改善과 平和統一을 성취해 나갈 基本章典으로서 南과 北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民族史的 責務를 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92년 2월 19일 남북간 高位級會談을 통하여 채택 발효된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는 “南과 北은 분단된 조국의 平和的 統一을 염원하는 온겨레의 뜻에 따라”, 쌍방 사이의 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特殊關係”라는 것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서로간에 和解(8개조항)와 不可侵(6개조항) 및 交流·協力(9개조항) 등 평화통일을 성취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合意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앞으로의 南北韓 관계를 규율해 나갈 통일의 歷史的인 基本章典이 되는 것이다.

이 『南北基本合意書』는 1972년에 있었던 『7.4 共同聲明』과는 역사적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다. 이번의 합의서는 쌍방의 총리가 수석대표로 참여한 책임있는 高位級 당국자들간의 公式會談을 통해 합의 채택된 분단사상 최초의 公式文書로서, 이를 이행해 나갈 制度的 裝置들과 구체적인 實踐措置들을 폭넓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7.4 共同聲明』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그러나 『南北基本合意書』의 채택이 그 자체로서 남북한 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南北韓 關係의 전도를 이끌어 갈 기본적인 약속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약속이 그대로 실천에 옮겨지리라 기대하는 것은

남북한간에 놓여 있는 현실적 여건이나 歷史的 經驗에 비추어 보아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南北基本合意書』가 단순히 정치적 宣言으로서가 아니라 분열되어 있는 民族共同體를 다시 하나로 복원시켜 나갈 수 있는 현실적 과제들을 하나씩 실행해 옮겨 나가는 통일에의 도정에 里程 標로써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汎民族的인 實踐意志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주제를 敎育하는데 있어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첫째로 『南北基本合意書』가 단순한 정치적 宣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의 基本章典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南北 쌍방에서 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民族史的 責任意識을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南北基本合意書』에 규정된 각 合意事項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方法과 준비되어야 할 課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로 『南北基本合意書』에 정해져 있는 합의사항들이 실제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가로 막고 있는 障礙要因과 쌍방간 입장의 差異點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①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1990, 182면)

— 남북화해·협력시대의 개막 / 『남북기본합의서』의 배경 및 경과 /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 /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내용 / 합의서 이행 기구 구성·운영 / 향후 실천과제와 전망 / 부록

② 통일원, 『통일문제연구(통권 제13호)』(1992, 293면)

—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격과 정치적 의의(정세현) /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현행 법제와 그 개선방향(오준근) / 남북기본합의서 후의 남북한관계와 평화체제(안병준) /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축소방안(이정민) / 남북한 경제교류 실천방안(이상만) /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인적교류(이재운) /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전망(곽태환)

統一準備

24. 南北의 住民들이 서로의 世界觀, 價値觀 그리고 삶의 方式의 差異를 認定하고 相對方의 立場을 理解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民族社會의 統合을 촉진하고, 統一 以後의 삶을 準備하는 始發點이다.

원래 하나였던 우리 민족이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서로 다른 理念과 體制아래 살아 온 때문에 쌍방간에는 사물을 보는 눈과 價値觀, 生活의 方式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와 異質性은 휴전선 남과 북에 형성되어진 상이한 政治·社會·文化構造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民族社會를 하나로 합쳐 이 땅에 統一을 성취하자는 우리의 노력은 오늘의 현실에 존재하는 이러한 상호간의 差異點을 서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다른 입장과 價値觀을 이해하려는 노력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이러한 상이점을 인식하는 일은 서로간에 의견의 合一點을 발견하고, 동족간의 葛藤을 해소해 나가는 일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이제 南과 北은 和解와 協力の 새 시대에 접어들려 하고 있다. 막혀있던 남북한의 사회는 조만간에 開放되고 주민간의 만남과 접촉의 기회는 크게 확대될 것이 틀림없다. 앞으로의 만남의 기회가 서로간에 상대방을 폭넓게 이해하고, ‘우리는 같은 民族’임을

확인할 수 있는 和合의 場이 되려면 남북 사이에 달라진 삶의 양식과 異質性을 현실로 인정하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또 民族成員 모두가 상대방의 다른 입장과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자기의 입장과 이익만을 내세우지 않는 民族 和合的 태도와 폭넓은 이해심을 가지는 일 또한 統一 以後의 삶을 질서있고 평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된다.

그러나 南北 주민간에 개재하는 世界觀과 價値觀, 그리고 삶의 방식상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民族的 同質性을 되찾고, 民族共同體의 삶을 회복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민족사회의 統合과 統一過程에서 예상되는 갖가지 葛藤의 素因을 예견하고, 이를 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일과 民族的 同質化의 기반을 키워나가는 일을 統一教育의 현장에서 서둘러야 한다.

統一教育의 각 과정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첫째, 集團主義 社會에서 ‘共產主義的 새 인간’으로 양육된 북한주민들의 특이한 意識 構造와 行動樣式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현존하는 남북사회의 精神文化的 차이와 異質性을 강조하는 나머지 이것이 통일을 어렵게 하는 기본적인 걸림돌이라는 오해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 참고문헌 】

- ① 김학준 외, 『남북의 생활상』(박영사, 1986, 329면)
- 한반도 분단 40년 / 삶의 과정 / 삶의 양식 / 삶의 환경 / 분단
극복을 위하여
- ② 국토통일원, 『분단국가의 문화통합』(1989, 213면)
- 종교와 체제통합 / 언어와 체제통합 / 예술과 체제통합 / 정치
문화와 체제통합
- ③ 정용길, 『분단국 통일론』(고려원, 1988, 451면)
- 독일편 / 한반도편 / 부록
- ④ 박재환, “갈등과 이데올로기”, 『사회갈등과 이데올로기』
(나남신서, 1992), pp.352-416.
- 갈등과 이데올로기의 상호침투 / 이데올로기의 일반적 함의 /
갈등의 동태와 이데올로기 / 갈등에서의 관념적 요인의 중요
성과 그 한계
- ⑤ 아브카리안·팔머, 『갈등의 사회이론』(서사연 역, 학문과 사상사,
1985, 404면)
- 사회갈등과 사회과학 / 사회갈등의 원인 / 사회갈등의 영역

25. 個人的 社會的 緊張과 葛藤, 利害關係를 合理的으로 調整하고 解決할 수 있는 能力의 培養이 統一을 앞당겨 나가며 統一에 對備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각기 世界觀과 價値觀을 달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층과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開放社會이며 多元主義社會이다. 따라서 사회성원과 성원사이, 사회집단이나 계층 사이에는 이해가 엇갈리고 주장하는 바가 각기 다를 수 있다. 이러한 利害關係의 相衝과 의견의 차이 때문에 개인적 사회적인 긴장과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같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가 효과적인 折衷 妥協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調整되고 統合되지 못하면, 국가나 사회가 지향해 나갈 방향과 목표가 정립될 수 없고, 또 共同의 目標를 효과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도 없게 된다.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統一問題는 민족성원 개개인이나 소속 集團 階層에 따라 이해와 견해가 다양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남북한의 立場과 主張 또한 크게 다른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이 있는 까닭은 統一에 거는 期待와 價値, 그리고 현실감각, 이해타산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각자가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대화와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통일

은 궁극적으로 어렵게 된다. 서로가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또 民族 전체의 利益 즉, 큰 이익을 위해서 個人과 소속 集團의 이익 즉, 작은 이익과 고집을 과감히 拋棄·犧牲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사회 구성원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합일시키고, 利害 당사자간의 이해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 사회 성원의 民主市民意識과 民主的인 意思決定 능력에 달려 있다.

우리는 지금 이런 태도와 民主的 意思決定能力, 行爲規範을 키워주는 교육과 훈련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에 이르러 있다. 이러한 民主的 態도와 民主市民的 資質의 배양은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和合과 團結을 기할 수 있어 통일을 앞당겨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統一 以後의 삶을 대비하는 일이 된다.

앞으로의 統一教育은 통일에 관한 자신과 타인의 주장사이에 생기는 葛藤과 緊張을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가·생존 그리고 발전』(1983, 287면)

- 국가란 무엇인가 / 민주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 공산주의 극복을 위한 이데올로기
- ② 이극찬 편, 『민주주의』(종로서적, 1983, 358면)
 -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점 / 민주주의의 본질 / 민주주의의 조건 / 민주주의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의 대립 / 민주적 인간의 형성
- ③ 박재환, 『사회갈등과 이데올로기』(나남신서, 1992, 447면)
 - 갈등의 이론 / 갈등의 동태 / 갈등과 사회와 문화
- ④ 전득주·최현섭,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시민교육”, 『현대민주시민교육론』(평민사, 1992), pp.217-252.
 - 한국의 민주화 /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 이상과 실제
- ⑤ 이동휘, “민주주의 정착과 시민윤리”, 『한민족공동체론』 (법문사, 1988), pp.340-363.
 - 한국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생활화 / 민주시민의 윤리 / 자율적 시민상
- ⑥ 고지마 군조, “민주적 인간의 형성”, 『민주주의』 (이극찬 편, 종로서적, 1983), pp.295-329.
 - 민주주의 교육의 본질 / 민주주의 교육에 있어서의 인간관계 / 민주주의 교육의 실천원리 / 민주주의적 교육제도 / 맺는말
- ⑦ 아브카리안·팔머, 『갈등의 사회이론』 (서사연 역, 학문과 사상사, 1985, 404면)
 - 사회갈등과 사회과학 / 사회갈등의 원인 / 사회갈등의 영역

26. 統一을 앞당겨 實現하는 일 못지않게 統一 以後의 삶에 對備하는 일도 중요하다. 統一은 그 자체가 目的이 아니라 民族 繁榮을 위한 하나의 條件인 것이다.

交流·協力の 새 時代를 맞아 통일은 눈앞의 현실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통일을 앞당겨 실현하려는 일에 못지않게 統一以後의 삶에 對備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땅에 統一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염원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삶이 일층 平和롭고 福된 것이 되고 통일이 된 국가에서 민족 전체가 繁榮과 發展을 기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의 기대는 통일이 되면 저절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統一後의 민족사회가 더욱 번영하고 발전해 나가며 민족성원 모두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이를 對備하는 일들을 하나씩 서둘러 나가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국민 각자가 통일 이후의 民族共同體的 삶에 적응해 나갈 민족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價値觀과 態度를 가지도록 국민에 대한 精神教育을 강화해 나가는 일이다. 그동안 분단체제하에서 누적되어 온 南北韓間의 異質化가 통일 이후에 많은 갈등과 혼란 등의 ‘統一後遺症’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統一教育에서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첫째, 서로 다른 제도와 생활경험으로 길들여진 南과 北의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공동체적 삶을 살아갈 때 야기될 갖가지 混亂과 不便, 葛藤요인들을 예견케 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국민 각자가 사전에 준비하고 키워나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統一을 對備하여 각 분야에서 제도를 정비 개선하고 사회적 경제적 역량을 비축 강화해 나가려는 정부의 정책노력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民族의 일원으로서 동참해야 한다는 使命意識을 고취하는 것이다.

셋째, 각자가 나와 내 가족 내 직장만을 생각하고, 내가 속한 集團이나 階層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편협한 이기심에서 벗어나 내 이웃과 내 同胞를 함께 생각하고, 사랑하는 폭넓은 마음씨를 가지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① 황성모, 『통일독일 현장연구』(도서출판 일념, 1990, 305면)
-분단과 통일과정의 역사/통독현장을 가다/통일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통일 후의 문제들
- ② 통일원, 『독일통일과 한반도』(1991, 219면)
-동서독 통일실현 과정의 점검/남북한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 ③ 양호민 외, “통일—어떻게 준비하나”,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나남, 1992), pp.255-374.
- 정치이념·체제통합의 과제 / 한국의 과제 / 북한의 정치개혁상
의 과제 / 경제통합의 과제 / 사회와 문화통합의 과제 / 통일의
교과제 / 법제도 통합의 과제 /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 통
일을 위한 국방
- ④ 신창섭, 『분단보다 통일비용이 싸다』(열음사, 1990, 229면)
- 독일이 통일됐다 / 통일과정 / 통일원동력 / 통독의 현장 / 통일
과 미래 / 자료
- ⑤ 대통령자문21세기위원회, 『2000년에 열리는 통일시대』
(동아일보사, 1993, 351면)
- 통일시나리오 / 정치통합 / 경제통합 / 사회통합 / 문화통합 /
이념·체제 / 안보·군사 / 국제관계 / 국가운영체제 / 국토개편 /
과학기술 / 복지·의료 / 국민생활

27. 平和는 統一로 가는 過程에서 뿐만 아니라 統一 以後의 삶이 幸福한 것이 될 수 있기 위해서 民族成員 모두의 意識 속에 정착되어야 할 最優先的 價値이다.

인간에게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해 주는 平和는 우리 인류가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벽을 넘어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하는 普遍的 價値의 하나이다.

우리가 統一이란 역사적 과업에서 추구해 나가고 있는 平和는 한반도에서 戰爭과 暴力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소극적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갖가지 不義와 不公平이 지배하는 ‘構造的 暴力’으로 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확대된 개념의 積極的 平和이어야 한다.

韓半島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일차적인 목표가 남북 사이에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소극적 의미의 제도화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려 하는 것이라면, 平和統一은 한반도에서 갖가지 ‘構造的 暴力’의 원천이 되고 있는 분단과 냉전의 극복을 통해 ‘擴大된 平和’를 이루어 나가려는 민족적 노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南北關係에 있어 평화는 상호관계의 실질적 개선과 통일이란 민족지상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條件이며, 기반적 秩序이고, 수단적 價値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화는 우리 민족이 統一된 未來社會에서 평화롭고 복된 民族共同體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우선하여 추

구될 가치의 하나가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南北關係에서 평화의 추구를 남북 사이의 平和定着이란 정치적·제도적 측면에만 중점하여 고찰해 왔고 이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통일의 주역인 國民 모두의 심성에 平和意識을 심어주고, 평화를 지켜나가려는 의지를 북돋아 나가는 일에 주력해 나가야 한다.

나라와 나라의 사이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평화로운 相互關係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안팎의 모든 도전요소들로부터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平和守護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곳에 항구적인 평화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는 스스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다. 개개인의 平和意志는 평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식이 내면화 되고, 하나의 價値規範으로 정착되어 있을 때에 비로서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統一教育은 이러한 평화 추구의 의지를 뒷받침해 주는 平和意識을 개개인의 심성에 심어주는데 더 큰 관심을 돌려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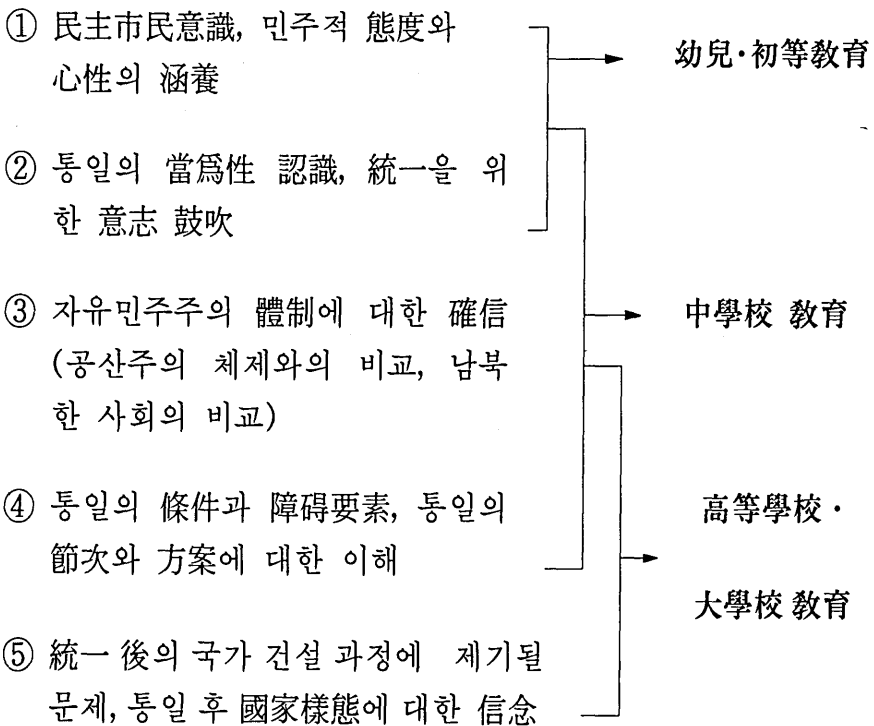
【 참고문헌 】

- ① 이삼열, 『평화의 철학과 통일의 실천』(햇빛, 1991, 475면)
- 평화문제의 철학적 탐구 / 평화운동의 이론과 실천 / 민족통일의 실천적 과제 / 평화선교와 통일의 실천 / 동·서독의 통일과 교훈 / 평화와 통일의 길목에서
- ② 이호재 편, 『한반도 평화론』(고대 평화연구소, 연구논총 제1집, 법문사, 1989, 490면)
- 한국인의 평화철학 모색 / 평화의 사회과학적 접근 / 한반도 평화의 환경과 조건
- ③ 하영선,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청계연구소, 1989, 433면)
-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 동북아시아 군사체제와 한국 / 국제군사체제 / 부록

IV. 實行上의 留意點

1. 學校에서의 統一교육

(1) 各급 學校에서의 統一教育의 目標은 다음 다섯가지로 設定할 수 있다. 이 다섯가지 목표중 각 教育段階에서 더욱 強調되어야 할 목표와 段階別 目標間의 連繫體系를 圖式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새로운 「統一教育의 基本方向」은 각급 학교의 국민윤리 또는 윤리, 도덕, 사회, 역사 등 關聯 各 教科에 걸쳐서 反映 되어야 한다.

○ 국민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 이르는 統一教育은 그 目標와 內容이 서로 連繫되고 계속되며 反復的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초·중등과정의 사회·(국민)윤리·도덕 등 관련 教科목에서 취급되고 있는 民主市民教育의 內容體系는 새로운 統一教育을 뒷받침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相互 連繫되고 補強 되어야 한다.

○ 기존의 教科내용이 본 指針과 相衝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교육과정의 개정될 때까지 본 指針이 提示하고 있는 方向에 따라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각급 學校教育에 있어서는 제시된 주제 내용을 학생들의 知的 發達 水準에 따라 조정하여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學校教育課程에 있어 統一教育은 학생들에게 統一問題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傳授를 통해 理解力과 思考力, 判斷力을 길러주는 認知的 目標와 함께 統一 後繼世代로서 바람직한 태도의 형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正립시켜주는 情意的 目標가 均衡 있게 추구되어야 한다.

- 知的 發達度가 낮은 국민학생 등 低學齡의 아동들에게는 知的 領域에 속하는 것 보다는 情意的 領域의 가치에 중점을 두어 가르치고 高學齡層에 갈수록 認知的 領域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좋다.
- (4) 統一을 對備하는 教育은 各급 學校教育課程에서 서둘러 遂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교교육에서는 남북간에 동질성의 회복을 촉진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서 同族感情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여 장래의 統一國家의 국민이 될 後繼世代들에게 필요한 民主市民的 의식과 價値規範을 일찍부터 함양시켜 나가야 한다.
- (5) 중학교 이상의 統一教育에서 교사는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결론으로 제시하는 일방적 注入式 授業方式 보다는 探究式 授業方法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
- 探究式 수업에 있어서는 해당문제에 관련된 최신의 정확한 情報·資料를 학생들에게 폭 넓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6) 오늘날과 같은 急變하는 세계정세와 남북관계의 전개상황

하에서 公式的 敎科課程의 適時 改編이나 狀況의 變化에 따른 指導指針의 제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敎育을 담당하는 敎사들은 항상 이러한 變化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보다 正確한 知識과 신속한 情報를 入手하여 學生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社會에서의 統一教育

(1) 目標 設定上的 留意點

- 새로운 사회통일교육에서 指向되어나갈 目標上的 位階는 다음과 같다.
 - ① 통일문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 수준을 고양하고, 이를 토대로
 - ② 통일주체로서의 책임감과 역할인식을 고취하며,
 - ③ 개개인에게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와 論議態度 및 規範을 습득케 하며, 이상을 바탕으로
 - ④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態度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 위 네가지 位階의 目標 중에서 어느 것에 力點을 두어 教授를 전개 할지는 教育대상의 水準과 教育기간의 長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短期教育(1~8시간의 教育과정)인 경우에는 네 목표 중의 ①과 ②, 또는 ①~③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教育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비교적 長期教育(2일 이상에 걸친 教育과정)인 경우에는 전체(①~④단계)를 적절히 안배하여 教授할 수도 있다.

(2) 內容 選定上的 留意點

- 선정된 教育내용은 위에서 설정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

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理論的인 면에서나 事實的인 면에서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 선정된 교육내용은 가치면에서 국민정신교육이 지향하는 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특정 체제나 집단에 대한 敵對感이나 偏見이 介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선정 조직된 교육내용은 結論을 담고 있기 보다는 結論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참고자료나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3) 指導上的의 留意點

- 教授者의 교육목표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을 구사해야 한다.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結論으로 제시하여 被教育者가 이를 믿고 따르게 하는 一方的 注入式 講義方式보다는 教授者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피교육자들이 지지, 반대 또는 의문점을 기탄없이 제기하고 토론하여 結論에 도달케 하는 探究式 授業方式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 教授者는 될 수 있는 한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관련된 교육 주제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教授者는 피교육자들에게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폭 넓게

알려줌과 동시에 피교육자들이 스스로의 판단능력과 自覺으로 관련문제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관심을 경주해야 한다.

- 教授者는 통일에 관한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개인, 집단, 국가의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기되고, 折衷·妥協되며, 어떻게 하나의 사회적 승의를 이루게 되는지를 직·간접적으로 체험케 하여, 피교육자들이 이러한 전개과정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行爲規範을 習得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새로운 통일교육에서 教授者는 국민 각자의 역할과 책임 의식 및 행위 규범의 준수를 전제로 하는 민주적 論議規範과 절차의 合理性을 習得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 成人에 대한 통일교육은 관련문제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傳授하고 바람직한 토론태도와 行爲規範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균형적으로 교수하되, 既成世代로서의 통일성취에 대한 공동책임감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教材 및 資料 準備上의 留意點

- 통일교육은 국가적 민족적 차원의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한 意圖的 教育 프로그램의 一環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이 추구하는 成就目標와 내용을 詳細化하여 피교육자

의 學習을 효율적으로 지도해 나갈 體系化된 敎案의 準備와 活用이 필요하다.

- 새로운 사회에서의 통일교육은 피교육자가 受動的으로 학습케 하는 교육만이 아니라 적극적 참여와 다양한 활동이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피교육자가 스스로 探究하여 문제점을 발견하며, 結論이나 代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자료를 創案해서 學習過程에 제공해야 한다.
- 敎授者의 敎案은 교육대상과 課程別로 細分化하여 각 주제항목별로 3~4쪽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정 敎授單位 時間當 1개의 敎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單位別 敎育展開案(instructional module)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5) 其他 活用上의 勸告事項

- 社會에서의 統一敎育은 특정 교육·연수기관의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신문·라디오·TV 등 각종 대중매체를 비롯하여 각종 사회단체 및 대중조직, 박물관, 전시관 등 社會公共施設物과 環境物 등의 다양한 政治社會化의 媒體들에 의하여 組織的으로 施行되도록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 모든 社會敎育의 主管機關은 새로운 統一時代에 대비하여

통일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는 데에 더 큰 관심을 집중하여야 한다.

-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목표가 사회교육과정의 그것과 서로 相衝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編成되고 상호 連繫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 새로운 지침을 반영해 나가기 위해 각종 教育·研修機關의 教授要員을 비롯한 관련 프로그램 담당 教育要員 전체에 대한 專門 研修機會가 확대되어야 한다.

和解 協力時代の
統一教育 基本方向

1993年 2月 日 印刷

1993年 2月 日 發行

發行處 統 一 院

教育弘報局 教育課

서울시종로구세종로77-6

☎ 738-7522

印刷處 양 동 문 화 사

《非賣品》

